

## Contents

신년사

2017년 센터 연구과제 수행 계획

국가회계 동향

재정통계 동향

오피니언

센터 동향

회의 및 세미나

공지사항

# 01 신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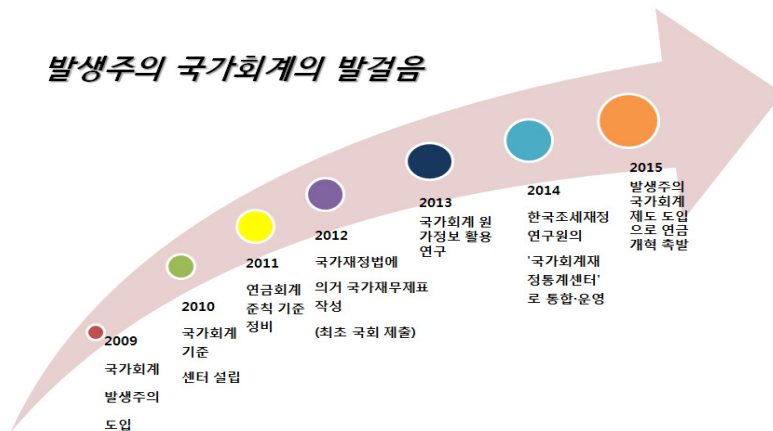
## 도입의 5년을 넘어 도약의 50년을 바라보며



정도진\_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2010년 국가회계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전문적인 연구·조사 기관으로 설립되어 국가회계기준의 정비, 중앙관서 재무제표 및 국가통합재무제표의 작성 지원, 공기업·준정부 기관의 결산보고서 작성 등 발생주의 국가회계정보의 정확한 산출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발생주의 국가회계는 2009년에 최초로 도입하여, 2011년에 연금회계준칙의 기준을 정비한 후, 2012년에 발생주의 국가재무제표를 최초로 국회에 제출하는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또한 2014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으로 통합되면서 조세·재정 전문가들과의 연구공유를 통해 산출정보의 완전성을 기할 수 있었고, 이는 2015년 공무원·군인연금의 개혁을 촉발하여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발생주의 국가재무정보는 국가회계 기준 재정비와 오류시정을 통해 정확한 정보의 산출이라는 일련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재무정보를 이용하여 정부조직 및 공공부문의 성과를 평가하거나 결산정보를 활용하여 예산편성에 적용하는 데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주소입니다. 즉, 발생주의 국가회계를 도입한 지 5년이라는 기간은 국가회계의 지침을 마련하여 실무의 환경과 결합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수정하고 제·개정된 지침을 정비하여 궁극적으로 발생주의 재무정보의 완성도를 높이는 시기였습니다. 아울러 이 시기에도 발생주의 국가회계정보를 활용하여 여러 가지 분석과 연구가 시도되었으나, 정보의 산출과정이 복잡하고 정보의 축적기간이 짧아서 구체적인 연구과제 진행계획을 세우지 못하여 선언과 제안에만 머무르는 한계<sup>1)</sup>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한계 때문에 발생주의 국가회계 도입 5주년이 지났으나 산출된 정보의 유용성을 검증하거나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 결과물은 거의 없습니다. 이는 산출 정보의 유용성마저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이를 활용한 연구의 단계로 나아가지 못했고, 정보축적의 시기가 짧아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자료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할 대안은 우리보다 발생주의 회계정보의 생성과 축적의 기간이 비교적 긴 해외 여러 나라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먼저 발생주의를 도입한 호주·뉴질랜드에서는 이미 안정과 활용을 넘어 거의 모든 공공기관에서 발생주의 회계를 사용하며, 결산정보를 이용하여 예산편성에 적용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2008년 금융위기와 재정위기 이후 재정적자 및 재정건전성 관리가 중요해진 EU에서는 발생주의 국가회계정보에 대한 다양한 측면의 많은 연구가 진행<sup>2)</sup>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센터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고 발생주의 국가회계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 2017년을 연구영역 확장 및 연구 깊이를 더해가는 연구 확산의 해로 삼고, 발생주의 재무정보의 유용성을 검증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연구 활성화를 꾀하고자 합니다.

1) 국가결산보고서가 복잡하여 국가재무정보의 이해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과 현재 D-brain 시스템에서 결산정보가 프로그램 단위로 집계되는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단위사업 혹은 세부사업으로 집계수준을 고도화하는 작업 등이 제안되었으나 뚜렷한 결과물을 생성하지 못함

2) Rosa Maria Dasí et al, "Government financial statistics and accounting in Europe: is ESA 2010 improving convergence?," Public Money & Management, Vol. 36, 2016.

Maria Antonia et al, "Governmental budgetary reporting systems in the European Union: is the accounting basis relevant for the deficit reliability?," International Review of Administrative Sciences, Vol. 81, 2016 등 다수의 연구

연구활성화를 위한 센터의 2017년도 연구계획을 대략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2017년 내외부 연구진 6명이 발생주의 재무정보의 유용성 검증을 목적으로 기본과제를 수행하며, 이 기본 연구를 근간으로 정책활용도 제고를 위한 정책연구자 2인을 초빙하여 약 4건의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한편, 6~8명의 외부전문가가 함께 토론하는 연구 공유의 장을 확대하기 위해 재정네트워크 정부회계분과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2017년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연구과제 수행계획을 살펴보면 기본과제의 경우 약 6명의 연구자가 3가지 주제에 대해 1년간 연구를 수행하며, 정책 연구는 2명의 외부연구자가 6개월 단위로 1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여 1년간 약 4건의 연구과제가 산출될 예정이며, 재정네트워크 정부회계분과를 통해 전문가의 의견이 결합된 6~8건의 연구결과물이 생성될 전망입니다.



이런 연구과정의 내실화는 지금까지 센터에서 수행해오고 있는 사전조사의 과정에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지난 5년간의 한계를 점검하고 이를 극복하여 내실있는 연구결과물을 산출하고자 다음과 같은 과정의 사전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과제 진행에 앞서 사전적으로, 5년간 축적된 발생주의 정보의 완성도를 점검하고, 검토하였지만 실행되지 못한 많은 제언

들을 검토하며, 우리보다 선진화된 여러 나라의 해외사례 연구결과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전조사의 결과는 2017년 센터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과제의 토대가 되어 연구영역 확대 및 연구 전문성 강화의 기틀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사전조사와 함께 기획된 구체적 연구계획의 작성은 2017년 다양한 연구과제 수행의 충실도를 높여 국가재무정보의 유용성 검증과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활용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것입니다.

센터가 2017년에 기본과제를 통하여 뿌리를 만들고, 정책연구로 확장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줄기를 만들어가며, 재정네트워크 정부회계분과를 통해서 여러 관련 분야의 전문가 목소리를 채워 내실 있는 '연구성과'라는 열매를 만들어 낸다면, 2017년은 도입의 5년을 넘어서서 도약의 50년을 향한 발생주의 정보 활용방안 연구의 첫해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 02

## 2017년 센터 연구과제 수행 계획

발생주의 국가회계 도입 5주년!

센터는 발생주의 국가회계 도입 시점에 신설되어 국가회계 지침의 초석을 만들고 5년간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침오류를 재정비하여, 정확한 재무정보를 국가재무제표에 담아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정확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발생주의 정보는 공무원·군인 연금개혁 촉발을 통해 재정의 효율화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발생주의 정보의 정확성과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책에 활용되거나 미래예측의 도구로 사용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는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연구되지 않았고 정보축적의 시기가 짧아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 센터는 2017년을 연구의 영역을 확장하고 연구의 깊이를 더해가는 연구 확산의 첫해로 삼아 발생주의 재무정보의 유용성을 검증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연구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센터는 2017년도 연구과제 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행하고자 합니다. 우선 **기본과제 수행을 연구의 근간**으로 하여, 정책활용도 제고를 위한 정책연구자 2인을 초빙하여 약 4건의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한편, 6~8명의 외부전문가의 조언을 결합하고자 **재정네트워크 정부회계분과**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첫째, 2017년 기본과제 수행을 통해 지난 5년간 노력의 산물인 정확한 재무정보를 이용하여 **‘발생주의 국가회계 재정정보의 유용성과 활용’**이라는 국가회계 재무정보의 유용성을 검증할 것입니다. 둘째, 외부의 **정책연구자 2인**을 초빙하여 발생주의 재무정보의 정책 활용방안과 예산연계 방안 등의 연구 확산을 기할 것이며, 셋째, 학제 간 상호 공동연구로 **재정네트워크 정부회계분과**를 활성화하여 센터 내 정보산출 과정의 실무적 성과와 외부연구자들의 전문적 **연구결과**를 결합하는 **확산의 과정**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 1 2017년 기본연구과제 진행 계획

센터에서는 2017년 ‘발생주의 국가회계 재정정보의 유용성과 활용’이라는 주제로 기본 연구과제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연구의 목적과 주요내용 및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가. 연구의 목적 및 주요내용

본 연구의 목적은 발생주의 국가재무제표 및 재정통계정보의 유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발생주의 국가재정정보와 거시경제요소 간 유의적 관계를 확인하고, 발생주의 국가재무정보를 활용한 유용한 정책결정 사례를 제시함에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3가지 연구주제를 검증하고자 합니다.

- ① 재정지출이 경제성장 및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현금주의 재정지출과 발생주의 재정지출의 설명력 차이 검증
  - 재정지출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정책의사결정에 널리 사용되기 때문에 정합성 높은 재정지출의 파악이 요구되며,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재정지출이 경제성장과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 그러나 현재 재정통계는 현금주의와 발생주의로 이원화되어 산출되고 있음
    - 현금주의 재정통계는 1979년 이래 GFS에 따라 산출되고 있으며, 현재는 86GFS에 따라 작성되어 정부통합재정수지에 보고됨
    - 발생주의 재정통계는 01GFS로 개정되면서 산출되기 시작하여, 우리나라는 2012회계연도부터 산출결과를 IMF에 보고하고 있음
    - 이와 더불어 한국은행은 08SNA에 따라 발생주의 통계를 제공하고 있으며, 산출된 통계를 국민계정 및 OECD에 보고함
  - 재정지출이 경제성장 및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재정지출이 경제성장 및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현금주의 재정지출과 발생주의 재정지출의 설명력 차이 검증이 목적임

- 이에 현금주의에 따른 재정지출(예, 86GFS)과 발생주의에 따른 재정지출(예, 01GFS, 08SNA)이 경제성장 및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차별적 설명력을 발생액(Accruals)인 회계이론을 통해 검증하여, 발생주의 국가재무제표 및 재정통계정보의 유용성을 확인하고자 함

### ② 발생주의 재정통계를 활용한 기능별 재정지출의 발생주의 도입 전후 효과 및 경제예측 효과 분석

- 기능별 재정지출의 중요성에 따라 다수의 선행연구들이 이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실증분석
- 본 연구는 발생주의 기반의 재정통계(예, 01GFS)를 활용하여 기능별 재정지출이 경제성장 및 재정건전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선행연구들과 달리 발생주의 도입 전후의 효과를 비교분석<sup>3)</sup>
- 본 연구를 통해 발생주의 도입으로 산출된 국가재정통계의 안정성을 검증하고, 발생주의 도입 전후의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발생주의 재정통계정보의 유용성을 확인<sup>4)</sup>
- 더불어 세계 주요국의 재정통계(예, GFS)를 비교분석하는 것이 가능하며, 현재 우리나라는 발생주의 기능별 재정지출을 공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유용성에 따라 공개 필요성을 확인 가능

### ③ 발생주의 국가재무정보와 세출예산 불용·이월액의 관계성 검증

- 발생주의 국가재무정보의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예산과의 연계 미흡 및 발생주의 재무정보에 대한 해석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국회의 결산심사 시 활용이 제한되는 등 발생주의 국가재무정보의 활용성 제고가 시급한 과제
-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발생주의 국가재무정보의 유용한 실례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세출예산 불용·이월액과 발생주의 재무정보의 관계를 검증하여, 불용·이월액의 발생 원인과 대책을 제시<sup>5)</sup>

3) 지금까지 발생주의에 기초한 우리나라의 정부기능별 지출은 GFS에 보고되지 않아서 선행연구들은 자료이용이 불가능하여 발생주의와 현금주의가 결합된 준 발생주의 형태의 OECD(국민계정)자료를 이용함

4)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가 내부적으로 산출·보유하고 있는 중앙·지방간 내부거래가 제거된 순계개념의 일반정부부문 정부기능별 지출자료와 GFS에 보고되는 각국의 발생주의 지출자료를 결합하여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를 통해 재정통계의 안정성과 유용성의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5) 세출예산과 세출결산과의 차이 즉, 집행잔액은 차년도 이월 또는 불용으로 처리됨. 불용·이월액은 일반적으로 지급사유 미발생, 계획변경과 취소, 세수부족, 수시예산 미배정 등의 사유로 발생되나, 사업별 특성에 따른 사유로 발생되기도 함. 예를 들어, 불용·이월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는 재정용자사업 또는 SOC의 시설비 등으로 나타남. 이러한 사업의 특성은 특정한 발생주의 국가회계 또는 재정정보와 상호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본 연구를 통해 현금주의 세출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발생주의 회계정보의 요인을 최초로 분석함으로써 발생주의 도입으로 인한 유용성을 실증사례를 통해 검증 가능

## 나. 주요 연구추진 일정

- 2017년 3월: 착수보고
- 2017년 3월~4월: 문헌조사
- 2017년 3월~6월: 현황분석(해외조사 포함)
- 2017년 4월~6월: 전문가 세미나
- 2017년 4월~7월: 데이터 수집·정리 및 실증분석
- 2017년 7월: 중간보고
- 2017년 7월~8월: 전문가 세미나
- 2017년 8월~10월: 분석결과의 수정·보완, 정책적 시사점 도출
- 2017년 10월: 최종보고

## 2 2017년 외부 정책연구자 연구진행 계획

센터에서는 2017년을 발생주의 재무정보의 유용성 검증 및 활용에 중점을 두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보의 유용성 검증을 위한 기본과제를 수행하는 한편, 연구의 영역 확대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외부의 정책연구자 2인을 초빙하여 연구 확산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초빙된 외부의 정책연구자는 센터 내부적으로는 축적된 국가회계 재무정보 산출과정의 실무 경험과 결합하여 연구의 완전성을 기하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차원에서는 조세재정전문가와 토론 및 연구공유를 통해 국가회계뿐만 아니라 조세·재정 전반을 아우르는 연구의 통합성을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발생주의 재무정보의 활용방안과 예산연계 방안까지 연구영역을 넓혀, 국가회계 재정통계센터의 연구영역 확대와 전문성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 3 2017년 재정네트워크 정부회계분과 진행계획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학제 간 연구 및 교류를 통해 연구의 영역을 확장하고 국가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우리 센터도 학제 간 상호 공동연구를 통하여 정부회계 관련 연구활성화를 위해 **재정네트워크 정부회계분과**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네트워크 위원은 공식적인 공모절차를 통해 구성되지 않았으나, 2017년부터는 회계 관련 여러 학회의 공고를 통해 정부회계분과 위원을 모집·선정하여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공모의 과정을 통해 형식적 공정성을 확보했다면, 연구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전문가들이 매달 1회 이상 반드시 분과회의에 참석하여 정부회계의 주요 이슈를 점검하고 연구에 직접 참여하며 상호교류를 통하여 연구가 활성화되도록 **재정네트워크 정부회계분과**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2017년 재정네트워크 정부회계분과 운영계획과 주요 연구주제 및 분과위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재정네트워크 정부회계분과 운영계획

- (목적) 정부회계의 주요 이슈에 대하여 정부회계 전문가들이 연구에 직접 참여하고, 전문가 상호간 연구 공유를 통하여 정부회계분야의 연구를 활성화
- (기간) 2017. 2월 ~ 10월, 총 8~10회
- (구성) 회계학 및 행정학 관련 교수진(6~8명)
- (주요네트워크 활동) 아래 3개 사항은 의무사항임
  - 구성원 1인당 1연구
  - 월례회의 참석(월 1회 이상)
  -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참석
- (기대효과) 정부회계 분야의 전문가들이 전문성, 경험, 문제인식 등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정책수립에 기여할 의사전달 채널 제공

나. 2017년 주요 연구주제 목록

- 발생주의 정부부문 재무정보의 활용성 제고
  - (주제 1) 정보이용자의 국가 회계정보 활용성 제고 방안 연구
    - : 예산을 편성·심의하는 정책당국 또는 국회가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재무정보 산출방안 마련
  - (주제 2) 발생주의 재정통계와 공공기관 재무정보 활용방안 연구
    - : 재정통계와 공공기관 재무정보를 바탕으로 정책적 의사결정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방안 마련

다. 2017년 재정네트워크 정부회계분과 위원현황

NO.	주제(가안)	연구진
1	국가회계 정보의 예산편성 환류방안에 관한 연구(회계학적 관점)	김이배 교수 (덕성여대 회계학)
2	예산 편성에 발생주의 정보가 활용되지 않는 이유에 대한 고찰	강태혁 교수 (한경대 행정학)
3	정보이용자의 국가 회계정보 활용성 제고 방안 연구	남혜정 교수 (동국대 회계학)
4	국가회계 정보의 이해가능성 제고 방안	이아영 교수 (강원대 회계학)
5	이연수선유지비의 측정 및 공시에 관한 연구	박성환 교수 (한밭대 경영회계학)
6	재정통계정보를 활용한 재정건전성 관리지표 발굴	전병욱 교수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7	국가회계 정보의 예산편성 환류방안 (행정학적 관점)	임동완 교수 (단국대 행정학)

주: 1번과 7번의 경우 회계학과 행정학 각각의 관점에서 바라본 예산편성 환류방안에 대해 공동연구 수행 예정

# 03

## 국가회계 동향

### 1 국가회계 국내동향

#### 가. 국가회계제도 개선 T/F 운영

기획재정부 재무회계팀과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국가회계제도 개선을 위한 ‘국가회계제도 개선 T/F(이하 ‘T/F’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다. 본 T/F는 2014년 국가회계 체계 개편의 후속 작업으로 2015년부터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올해에는 6월말부터 11월초까지 4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였다. T/F는 국가회계제도를 ‘법령·예규’와 ‘결산보고서’로 구분하여,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검토·논의하고, 중요성과 시급성에 따라 국가회계기준과 예규, 결산보고서의 순차적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가회계제도 개선 T/F 회의 개최 현황〉

안건	일정	1차 (6/29(수))	2차 (7/22(금))	3차 (8/2(화))	4차 (11/3(목))	
1. 자산재평가 회계처리 개선	과제 보고	과제 보고	검토	논의(소위상정)	논의(소위상정)	
2-1. 우발상황 회계처리 개선(국가회계기준)			검토	논의(소위상정)	논의(안건제외)	
2-2. 우발상황 회계처리 개선(국가회계예규)			검토	논의(소위상정)	논의(소위상정)	
3. 소송충당부채 인식기준 마련			검토	논의(안건제외)		
4. 연금보고서 통일방안 마련					검토(안건제외)	
5. 결산보고서 개선						검토(안건제외)
6. 정부내자산기부 정의 수정						논의(소위상정)
7. 연금 회계처리지침 오류 수정				논의(소위상정)		

4차례에 걸친 T/F 회의 결과 3개의 심의안건과 1개의 논의안건이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며, 최종 심의안건 3개는 소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에 상정·의결되었다. 최종 심의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은 ‘자산재평가 회계처리 개선’ 등 유보된 과제에 대하여도 향후 추가 논의를 거쳐 개선해 나아갈 계획이다.

### 나.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소위원회 개최

국가회계제도 개정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한 2016년 마지막 소위원회가 11월 25일 서울지방조달청 본관 3층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소위원회에서는 임동규 기획재정부 재무회계팀장의 주재로 민간전문위원 7인(위원장 김경호 교수 외)이 참석하여 총 4개의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다.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상정안건 및 논의결과〉

개회일	구 분	안 건	논의 결과
11월25일	심의안건	「우발상황 회계처리지침(예규)」 일부 개정(안)	원안 의결
		「비용 회계처리지침(예규)」 일부 개정(안)	수정 의결
		「연금 회계처리지침(예규)」 일부 개정(안)	원안 의결
	논의안건	자산재평가 회계처리 개선안	유보 후 재논의

소위원회 안건은 지난 8월 26일 1차 소위원회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한 2차례의 사전 회의에서 논의된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되었다. 소위원회 사전 회의는 11월 15일부터 16일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 중 일정이 가능한 민간위원 4명을 직접 방문하여 상정안건에 대하여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기획재정부는 소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한 3개의 최종 안건을 서면 결의의 형태로 국가회계제도 심의위원회에 상정·의결하였다.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소위원회(11.25.), 서울지방조달청 본관3층 회의실〉

### 다. 제23차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개최

발생주의·복식부기 국가회계제도의 의결기구인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위원장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가 서면결의 형태로 진행되어 「우발상황 회계처리지침(예규)」 일부 개정(안) 등 3개의 안건을 최종 심의·의결하였다. 국가회계제도 개정사항은 국가회계제도 개선 T/F 회의(총 4회, '16.6.29.~11.3.)와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소위원회(총 4회, '16.8.26.~11.25.)의 검토를 거쳐 제23차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이 개정사항은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의결 사항을 반영하여 향후 관계부처 의견조화를 거친 후 공표되며, 2017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라. 2016회계연도 일선관서 결산교육 실시

기획재정부는 2016회계연도 국가결산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2016회계연도 일선관서 결산교육을 실시하였다.



〈2016회계연도 일선관서 결산교육(11.22.), 수원 문화의전당 대회의실〉

2016회계연도 일선관서 결산교육은 11월 17일부터 12월 2일까지 일선관서 회계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전국 주요 12개 도시(춘천, 세종, 안동, 수원, 대구, 인천, 서울, 창원, 전주, 부산, 광주, 제주)에서 실시되었고, 총 3,852명의 회계 관련 공무원들이 정부결산 작성지침, 재무결산 오류사례, 국유재산 결산 교육 이수를 완료하였다. 특히 이번 일선관서 결산교육은 작년 5개 도시(세종, 서울, 대구, 광주, 부산)에서 12개 도시로 확장하여 재무결산에 대한 공무원의 관심을 크게 제고하였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재무결산 오류사례 강의를 통해 수입·지출·국유재산·물품 관련 디브레인 업무 처리시 발생하기 쉬운 재무결산 오류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교육하여 향후 일선관서 업무담당자들이 관련 오류를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 2016회계연도 재무결산 담당자 워크숍 개최**

기획재정부는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와 함께 2016회계연도 재무결산을 대비하여,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 강원도 삼척 대명리조트 쉰비치에서 재무결산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재무결산 담당자 워크숍에는 임동규 기획재정부 재무회계팀장이 참석하여 결산 기간 동안 재무결산 담당자들의 수고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달했으며, 정도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은 재무결산 개선을 위한 담당자들의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하였다.



〈2016회계연도 재무결산 담당자 워크숍(10.24.), 강원도 삼척 대명리조트 쉰비치〉

기획재정부는 2016회계연도 결산보고서 제출기한에 대한 설명과 함께 2016회계연도 중간점검 결과를 공유하면서 11월 30일 이전까지 조치가 완료되도록 부처 내에서 항목별 조치계획 등 중간점검 일정을 수립하도록 요구하였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2016회계연도 재무결산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국가회계기준 개정 사항, 2015회계연도 감사원 지적사항 및 2015회계연도 결산보고서 작성 오류사항을 토대로 결산담당자들이 결산보고서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점들을 설명하였다. 또한 재무결산 개선 관련 분임토의를 통하여 각 부처 및 회계·기금 결산담당자들이 서로 의견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분임토의 결과 등이 2016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계획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바. 2016회계연도 결산작성지침 배포 및 중앙관서 결산교육

기획재정부는 2016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앞두고 「2016회계연도 결산작성지침(III)」을 발간하였다. 「2016회계연도 결산작성지침(III)」은 국가결산 개설, 디브레인을 통한 결산서 작성방법, 결산보고서 작성양식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결산 주요 변동 및 유의사항 등 각 회계·기금 및 중앙관서 결산담당자들이 2016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12월 6일부터 21일까지 실시된 중앙관서 결산교육에서 국가결산 주요 변동 사항 및 유의사항과 2015회계연도 결산보고서 작성 오류사항을 결산담당자들에게 전달하였으며, 이를 통해 2016회계연도 국가결산 작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2 국가회계 해외동향

### 가. 미국 연방회계기준자문위원회(FASAB<sup>6)</sup>) 동향

#### 1) 공개초안 ‘리스: SFFAS<sup>7)</sup> 5, 연방정부 부채 회계처리 및 SFFAS 6, 유형자산 회계처리 개정’ 발표

FASAB는 2016년 9월 26일 공개초안 ‘리스: SFFAS 5, 연방정부 부채 회계처리 및 SFFAS 6, 유형자산 회계처리의 개정’을 발표하였다.

이번 공개초안은 기존에 ‘SFFAS 5, 연방정부 부채 회계처리’와 ‘SFFAS 6, 유형자산 회계처리’에서 나누어 규정하고 있던 연방정부 리스 회계처리기준을 통합하여 개정한 것으로, 정부내 리스이거나 단기 리스인 경우를 제외하고 연방정부가 리스 이용자인 경우 리스 개시 시점에 리스 부채와 리스 자산을 인식하고, 리스 제공자인 경우 리스 채권과 이연 수익을 인식하도록 규정한다. 공개초안은 또한 정부내 리스에 대한 인식과 측정, 공시사항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FASAB는 이 공개초안이 연방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보다 목적적합하고 유용한 재무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2017년 1월 6일까지 이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출처) [http://files.fasab.gov/pdf/leases\\_ed\\_nr\\_2016.pdf](http://files.fasab.gov/pdf/leases_ed_nr_2016.pdf)

#### 2) 공개초안 ‘연방정부 재무보고에 대한 개념서’ 발표

FASAB는 2016년 9월 29일 ‘연방정부 재무회계 개념서’의 공개초안인 ‘연방정부 재무보고’를 발표하였다.

FASAB는 이 공개초안이 FASAB에서 연방정부 전체와 이를 구성하는 보고실체의 보고 모형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개념과 연방정부 재무보고에 관한 현재와 앞으로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6) FASAB: Federal Accounting Standards Advisory Board(미국 연방회계기준자문위원회)

7) SFFAS: Statements of Federal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미국 연방재무회계기준)

또한 연방정부와 그 구성 보고실체가 국민들이 접근하여 이용 가능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와 정보를 만들어 내고 있기 때문에 정보 이용자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GAAP<sup>8)</sup>)에서 요구하는 정보와 기타 정보 간의 관계는 물론 예산, 원가, 성과 등 정보의 유형 간 관계나 연방정부와 그 구성 보고실체가 표시하는 정보 간의 관계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FASAB는 2017년 1월 6일까지 이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출처) [http://files.fasab.gov/pdf/files/federal\\_financial\\_reporting\\_ed\\_nr\\_sep\\_2016.pdf](http://files.fasab.gov/pdf/files/federal_financial_reporting_ed_nr_sep_2016.pdf)

## 나. 미국 주·지방정부 회계기준위원회(GASB<sup>9</sup>) 동향

### 1) 공개초안 ‘기타퇴직후급여제도에 대한 실무적용지침’ 발표

GASB는 2016년 10월 18일 기타퇴직후급여제도(OPEB plans)\*에 관한 실무적용지침의 공개초안을 발행했다.

이번 실무적용지침 공개초안은 GASB가 지난 2015년 6월에 발표한 신규 기준서인 ‘GASB Statement No. 74, 연금제도 이외의 퇴직후급여제도\*의 재무보고’에 따른 요구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해당 기준서에 대해 제기되었던 150개 이상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담고 있다.

\* 기타퇴직후급여제도(other post-employment benefit plans, OPEB plans)란 연금제도 이외 퇴직후급여제도(Benefit Plans Other Than Pension Plans)를 말함

GASB는 이해관계자들이 2016년 12월 19일까지 검토하고 의견을 제공할 것을 요청하였다.

(출처) [http://www.gasb.org/cs/ContentServer?c=GASBContent\\_C&pagename=GASB%2FGASBContent\\_C%2FGASBNewsPage&cid=1176168532005](http://www.gasb.org/cs/ContentServer?c=GASBContent_C&pagename=GASB%2FGASBContent_C%2FGASBNewsPage&cid=1176168532005)

8) GAAP: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9) GASB: Governmental Accounting Standards Board(미국 주·지방정부 회계기준위원회)

## 2) ‘GASB Statement No. 83, 특정 복구충당부채’ 발행

GASB는 2016년 12월 7일 ‘GASB Statement No. 83, 특정 복구충당부채’를 발행하여, 복구충당부채 회계처리에 대한 가이드를 마련하였다.

복구충당부채(Asset Retirement Obligation)는 유형자산을 해체, 제거하고 복구할 법적 강제 의무에 따른 부채를 말한다. 주·지방정부는 법령, 계약 또는 판결에 따라 원자로나 하수 처리장과 같은 특정 유형자산을 해체·제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GASB Statement No. 83에 따르면, 미래 유형자산의 복구 활동을 수행해야 할 법적 의무를 가진 주·지방정부는 복구충당부채와 그에 상응하는 이연 자원 유출액(deferred outflow of resources)을 인식해야 한다.

복구충당부채는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출의 현재 가치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를 기초로 측정하며, 이연 자원 유출액은 최초 측정 시 부채 금액으로 측정된 후 일반적으로 자산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고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또한 기준서는 복구충당부채 및 관련 유형자산에 대한 일반적 설명과 자산 복구 의무의 근거, 부채 측정 시 사용되는 방법과 가정, 기타 관련 정보를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GASB는 이 기준서가 주·지방정부에 복구충당부채에 대한 명확하고 일관된 회계기준 및 재무보고 기준을 확립해 주는 데 의의를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GASB Statement No. 83은 2018년 6월 15일 이후 개시되는 보고기간에 적용되며, 조기 적용이 허용된다.

(출처) [http://www.gasb.org/cs/ContentServer?c=GASBContent\\_C&pagename=GASB%2FGASBContent\\_C%2FGASBNewsPage&cid=1176168668822](http://www.gasb.org/cs/ContentServer?c=GASBContent_C&pagename=GASB%2FGASBContent_C%2FGASBNewsPage&cid=1176168668822)

## 다. 캐나다 공공부문화계기준위원회(PSAB<sup>10</sup>) 동향

### 1) 'PS 4260, 비영리 조직의 특수관계자 거래 공시'의 철회

PSAB는 'PS 4260, 비영리 조직의 특수관계자 거래 공시'의 철회 근거를 담은 결론도출근거를 2016년 12월에 발간하였다.

\* 결론도출근거(Basis for Conclusions)는 PSAB 실무자들이 작성한 문서로 캐나다 CPA PSA Handbook이나 공공부문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GAAP)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PSAB가 공개초안에 대한 회신에서 나온 주요 이슈사항에 대해 결론을 내린 과정을 정리하여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기준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다.

PSAB는 지난 2015년 3월에 'PS 2200, 특수관계자 공시'를 제정하였고, 이어 2016년 1월에 'PS 4260, 비영리 조직의 특수관계자 거래 공시'의 철회를 제안하는 공개초안을 발표하였으며, 그 응답 결과에 따라 2016년 9월에 PS 4260의 철회를 결정하였다.

2015년에 제정된 PS 2200의 경우 철회된 PS 4260\*과 달리 특수관계자의 정의에 '유의적인 영향력'과 '경제적 이익'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의 혼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PSAB는 PS 2200의 특수관계자 정의에 각주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두 가지 개념을 반영하였다.

\* PS 4260은 '유의적인 영향력'을 실제의 전략적 운영, 투자 및 재무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경제적 이익이 존재하는 경우'를 보고조직을 위해 수익을 창출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다른 조직이 보유하거나 보고조직이 다른 조직의 부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음

PSAB는 PS 4200 시리즈(PS 4200부터 PS 4270까지)를 적용받는 실체의 경우 PS 2200에 따른 공시 요구사항 및 'PS 4250, 비영리 조직의 지배실체 및 관계실체에 대한 보고'에 따른 공시 요구사항을 함께 적용하면 비영리 조직이 다른 기업에 대해 유의적인 영향력이나 경제적 이익을 가질 때 보고하였던 현행 공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PS 4260의 철회가 현행 보고서 작성 업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출처) <http://www.frascanada.ca/public-sector-accounting-board/index.aspx>

10) PSAB: Public Sector Accounting Board(캐나다 공공부문화계기준위원회)

## 04

## 재정통계 동향

## 1 OECD 국가의 재정수지 및 부채 동향

OECD는 2016년 11월 *OECD Economic Outlook NO. 100* 을 통해 OECD 국가의 일반정부 재정수지 및 총금융부채 정보를 공개하였다. OECD 주요 국가의 GDP 대비 재정수지(Net lending/borrowing) 및 총금융부채(Gross financial liabilities)의 비율 자료는 다음과 같다.

(단위 : GDP 대비, %)

구 분	일반정부 재정수지 (Net lending/borrowing)			일반정부 총금융부채 (Gross financial liabilities)		
	2013년	2014년	2015년	2013년	2014년	2015년
호주	△2.0	△2.3	△1.8	38.3	42.3	44.5
오스트리아	△1.4	△2.7	△1.0	99.0	106.8	106.2
벨기에	△3.0	△3.1	△2.5	118.3	129.5	126.7
캐나다	△1.9	△0.5	△1.3	90.3	93.2	98.5
에스토니아	△0.2	0.7	0.1	13.7	14.1	12.9
핀란드	△2.6	△3.2	△2.8	64.5	71.5	74.2
프랑스	△4.0	△4.0	△3.5	110.9	120.3	120.9
독일	△0.2	0.3	0.7	81.5	81.9	77.9
그리스	△13.2	△3.6	△7.5	182.8	182.8	183.9
헝가리	△2.6	△2.1	△1.6	96.5	98.7	97.0
아이슬란드	△1.8	△0.1	△0.8	87.2	83.1	73.8
아일랜드	△5.7	△3.7	△1.9	134.3	124.1	92.7
이스라엘	△4.0	△3.2	△2.1	67.0	66.0	64.1
이탈리아	△2.7	△3.0	△2.6	145.5	158.3	159.6
일본	△8.5	△6.2	△5.4	221.5	227.7	229.9
한국 <sup>1)</sup>	1.3	1.3	1.4	39.6	41.8	43.4
룩셈부르크	1.0	1.5	1.6	30.2	32.0	31.4
네덜란드	△2.4	△2.3	△1.9	76.5	81.2	77.9
뉴질랜드	△0.8	△0.1	△0.3	40.5	40.9	41.0
노르웨이	10.8	8.8	6.4	35.5	33.2	39.1
폴란드	△4.1	△3.4	△2.6	62.4	66.0	66.2
포르투갈	△4.8	△7.2	△4.4	142.9	152.7	149.8
슬로바키아	△2.7	△2.7	△2.7	61.2	60.5	59.2
스페인	△7.0	△6.0	△5.1	105.6	118.9	116.8
스웨덴	△1.4	△1.6	0.2	48.6	55.5	53.8

(단위 : GDP 대비, %)

구 분	일반정부 재정수지 (Net lending/borrowing)			일반정부 총금융부채 (Gross financial liabilities)		
	2013년	2014년	2015년	2013년	2014년	2015년
스위스	△0.5	△0.3	1.1	45.5	45.7	44.6
영국	△5.7	△5.6	△4.3	102.9	113.4	112.0
미국	△5.5	△5.0	△4.4	112.1	112.3	114.0
유로지역 (15개국) 평균	△3.0	△2.6	△2.1	105.5	112.0	109.7
OECD-총액	△4.1	△3.5	△3.0	111.8	115.1	115.5

주: 1) 한국의 일반정부 총금융부채는 기획재정부 보도자료('16.12.23)에서 D2(일반정부 부채)를 활용함  
출처: stats.oecd.org.

우리나라 일반정부의 재정수지는 2015년 GDP 대비 1.4%로 전기(1.3%) 대비 0.1%p 소폭 상승하였으며, OECD 전체평균 △3.0% 및 유로지역 15개국 평균 △2.1%에 비해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일반정부의 총금융부채는 2015년 GDP 대비 43.4%로 OECD 전체평균 115.5% 및 유로지역 15개국 평균 109.7%에 비해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 2 2015년말 공공부문 부채(D3) 산출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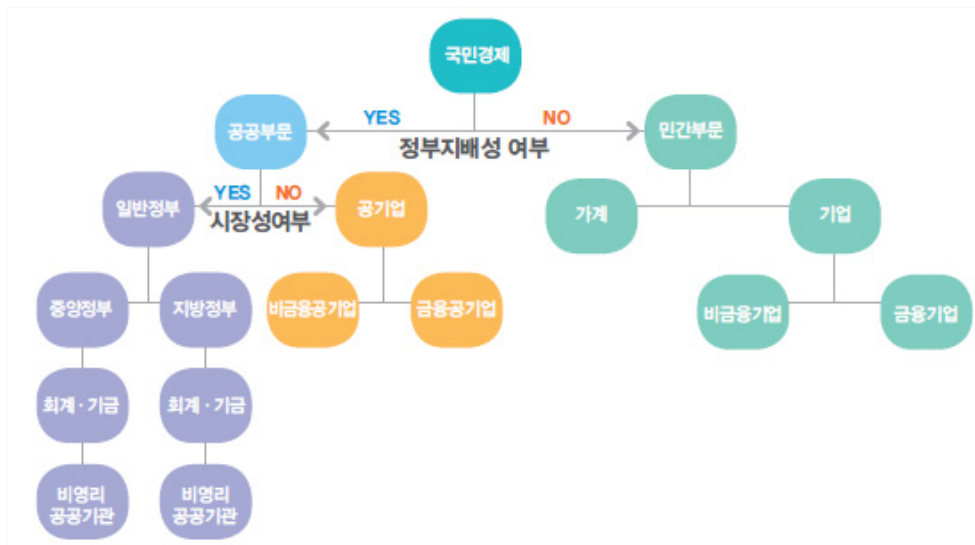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기획재정부에서 12월 23일(금)에 발표한 2015회계연도 공공부문 부채를 PSDS(Public Sector Debt Statistics) 기준에 따라 산출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채무(D1)뿐만 아니라 공기업 부채 등 잠재적 재정위험까지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국제기준에 따라 일반정부 부채(D2) 및 공공부문 부채(D3) 실적치를 익년도 12월에 산출·공개하고 있다.

### 가. 산출 범위

#### 1) 포괄 범위

공공부문 부채(D3)는 정부의 지배성 여부를 기준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분류하여 공공부문 포괄범위를 설정한 후, 시장성 여부를 기준으로 일반정부와 공기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공공부문 Decision tree]



- 정부지배성 여부 판정 기준 : 정부가 과반수 이상의 의결권, 주요 인사에 대한 임명권 등을 보유한 경우 지배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공공부문으로 분류
- 시장성 여부 판정 기준 : 원가보상률(판매액 / 생산원가)이 50%이하이거나, 정부판매비율이 80%이상이면, 시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일반정부로 분류

2015회계연도 공공부문 포괄범위의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상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상 공사·공단, 공영방송사, 국립대학법인 등을 포함하여 총 461개 기관을 포괄\*하고 있으며, 이 중 시장성이 없는 286개 기관은 정부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아 일반정부(비영리공공기관)로 분류, 시장성이 있는 175개 기관은 비금융공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 금융공기업(13개)은 제외, 지방공기업법상 직영공기업(257개)은 지방자치단체에 포함

## 2) 부채 범위

공공부문 부채(D3)는 발생주의 회계를 원칙으로 하며, 부채를 미래의 특정시점에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채무상품으로 정의한다. 한편, 채무상품은 채무증권, 차입금, 기타 미지급금 등으로 분류하여 집계하고 있다.

## 나. 공공부문 부채통계 현황

### 1) 부문별 현황

2015회계연도 공공부문 부채(D3)는 1,003.5조원(GDP 대비 64.4%)으로 전년(957.3조원) 대비 46.2조원 증가하였으나, GDP 대비로는 0.1%p 감소하였다.

일반정부 부채는 676.2조원(GDP 대비 43.4%)으로, 전년(620.6조원) 대비 55.6조원, GDP 대비 1.6%p 증가하였고,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398.9조원(GDP 대비 25.6%)으로 전년(408.5조원) 대비 9.6조원, GDP 대비 1.9%p 감소하였다.

(단위: 조원, %, %p)

	2014년(A)		2015년(B)		증감(B-A)	
	규모	GDP 대비	규모	GDP 대비	규모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A+B-C)	957.3	64.5	1,003.5	64.4	46.2	△0.1
A. 일반정부 부채 (a+b+c-d)	620.6	41.8	676.2	43.4	55.6	1.6
a. 중앙정부	525.8	35.4	579.2	37.2	53.3	1.8
b. 지방정부	57.4	3.9	64.0	4.1	6.6	0.2
c. 비영리공공기관	55.5	3.7	53.5	3.4	△1.9	△0.3
d. 내부거래	18.1	1.2	20.5	1.3	2.4	0.1
B. 비금융공기업 부채(a+b-c)	408.5	27.5	398.9	25.6	△9.6	△1.9
a. 중앙 공기업	366.3	24.7	358.2	23.0	△8.1	△1.7
b. 지방 공기업	49.4	3.3	47.7	3.1	△1.7	△0.2
c. 내부거래	7.2	0.5	7.0	0.4	△0.2	△0.1
C. 내부거래	71.7	4.8	71.6	4.6	△0.2	△0.2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5년 공공부문 부채(D3) 실적치 발표(2016.12.23.)'

### 2) 부채 항목별 현황

2015회계연도 공공부문 부채(D3)는 채무증권 733.1조원, 차입금 109.5조원, 기타 미지급금 161.0조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채무증권이 전체 부채의 73.0%를 차지하고 있다.

증가폭이 가장 큰 항목은 채무증권으로 전년대비 35.3조원 증가했으며, 대부분 일반회계 적자보전 및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국고채 증가(48.6조원)에 기인하였다.

(단위: 조원, %, %p)

	2014년(A)		2015년(B)		증감(B-A)	
	규모	구성비	규모	구성비	규모	구성비
■ 채무증권	697.8	(72.9)	733.1	(73.0)	35.3	(0.1)
■ 차입금	99.9	(10.4)	109.5	(11.0)	9.6	(0.6)
■ 기타 미지급금	159.7	(16.7)	161.0	(16.0)	1.3	(△0.7)
합 계	957.3	(100.0)	1,003.5	(100.0)	46.2	-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5년 공공부문 부채(D3) 실적치 발표(2016.12.23.)'

#### 다. 공공부문 부채 부문별 증감 분석

##### 1) 중앙정부 부채

2015 회계연도의 중앙정부 부채는 전년 525.8조원(GDP 대비 35.4%) 대비 53.3조원이 증가한 579.2조원(GDP 대비 37.2%)으로 산출되었으며, 이는 중앙정부의 적극적 재정운용으로 인한 부채 증가로 분석된다.

(단위: 조원, %, %p)

	2014년(A)		2015년(B)		증감(B-A)	
	규모	GDP 대비	규모	GDP 대비	규모	GDP 대비
◆ 중앙정부	525.8	35.4	579.2	37.2	53.3	1.8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5년 공공부문 부채(D3) 실적치 발표(2016.12.23.)'

(채무증권)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에서 발행한 공채가 4.5조원 감소 하였으나, 일반회계 적자보전 및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국고채가 48.6조원이 증가하였다.

(단위: 조원)

	2014년(A)	2015년(B)	증감(B-A)
◆ 국채	501.7	556.9	55.2
■ 국고채	441.9	490.5	48.6
■ 외국환평형기금채권	7.0	7.1	0.1
■ 국민주택채권	52.8	59.3	6.5
◆ 공채	33.3	28.8	△4.5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18.5	14.7	△3.8
■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14.8	14.1	△0.7
◆ 자기 국·공채	△99.5	△109.3	△9.8

출처: 2015회계연도 기금별 결산보고서

(차입금) 주택도시기금 청약저축금액 11.7조원, BTL 미지급금\*이 전년대비 0.3조원 증가하였다.

\*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에 의해 취득한 일반 유형자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반대급부로 임대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대료의 금액

(단위: 조원)

	2014년(A)	2015년(B)	증감(B-A)
◆ 청약저축	41.4	53.1	11.7
◆ BTL 미지급금	7.2	7.5	0.3

출처: 2015회계연도 국가 결산보고서

## 2) 지방정부 부채

지방정부의 총 부채는 전년 57.4조원(GDP 대비 3.9%) 대비 6.6조원 증가한 64.0조원(GDP 대비 4.1%)이 산출되었다. 부채 증가분의 대부분은 교육자치단체 부채가 5.7조원 증가한데 기인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1.6조원 증가하였다.

(단위: 조원, %, %p)

	2014년(A)		2015년(B)		증감(B-A)	
	규모	GDP 대비	규모	GDP 대비	규모	GDP 대비
◆ 지방정부 부채	57.4	3.9	64.0	4.1	6.6	0.2
▪ 지방자치단체	45.9	3.1	47.5	3.0	1.6	△0.1
▪ 교육자치단체	12.2	0.8	17.9	1.1	5.7	0.3
▪ 내부거래	△0.8	△0.1	△1.4	△0.1	△0.6	△0.0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5년 공공부문 부채(D3) 실적치 발표(2016.12.23.)'

(지방자치단체) 장·단기차입금이 2.1조원 감소하였으나, BTL 미지급금이 1.0조원 증가하였으며 지자체의 사업재원 확보 및 지역개발기금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액이 증가하였다

(교육자치단체) 학교 신·증설에 따른 지방교육채 발행(5.7조원) 등의 사유로 전기(12.2조원) 대비 부채가 5.7조원 증가하였다.

### 3) 비영리공공기관 부채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는 전년 55.5조원(GDP 대비 3.7%) 대비 1.9조원 감소한 53.5조원(GDP 대비 3.4%)으로, 중앙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 감소액 1.6조원이 부채 감소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단위: 조원, %, %p)

	2014년(A)		2015년(B)		증감(B-A)	
	규모	GDP 대비	규모	GDP 대비	규모	GDP 대비
◆ 비영리공공기관 부채	55.5	3.7	53.5	3.4	△1.9	△0.3
▪ 중앙 비영리공공기관	54.4	3.7	52.8	3.4	△1.6	△0.3
▪ 지방 비영리공공기관	1.2	0.1	1.0	0.1	△0.2	△0.0
▪ 내부거래	△0.2	△0.0	△0.3	△0.0	△0.1	△0.0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5년 공공부문 부채(D3) 실적치 발표(2016.12.23.)'

(중앙 비영리공공기관) 한국장학재단(1.2조원) 및 한국농어촌공사(1.0조원) 등 일부 기관의 부채는 증가하였으나 예금보험공사(△4.2조원)의 부채 감축으로 결과적으로는 감소하였다.

(지방 비영리공공기관) 대구도시철도공사(△0.1조원), 인천교통공사(△0.1조원) 감소 등의 원인으로 지방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가 감소하였다.

#### 4) 비금융공기업 부채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전년 408.5조원(GDP 대비 27.5%) 대비 9.6조원 감소한 398.9조원(GDP 대비 25.6%)으로 집계되었다. 중앙(△8.1조원)·지방(△1.7조원) 비금융공기업 부채 모두 감소하였으며, 이는 공기업 부채 감축 정책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중앙 비금융공기업은 LH(△5.2조원), 한국가스공사(△4.5조원), 한전 및 발전자회사(△1.2조원)의 부채 감소로 8.1조원 감소하였으며, 지방 비금융공기업도 도시개발공사의 부채감축으로(인천도시공사 △0.7조원, 경기도시공사 △0.7조원, SH공사 △0.2조원) 1.7조원 감소하였다.

(단위: 조원, %, %p)

	2014년(A)		2015년(B)		증감(B-A)	
	규모	GDP 대비	규모	GDP 대비	규모	GDP 대비
◆ 비금융공기업 부채	408.5	27.5	398.9	25.6	△9.6	△1.9
▪ 중앙 비금융공기업	366.3	24.7	358.2	23.0	△8.1	△1.7
▪ 지방 비금융공기업	49.4	3.3	47.7	3.1	△1.7	△0.2
▪ 내부거래	△7.2	△0.5	△7.0	△0.4	0.2	0.1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5년 공공부문 부채(D3) 실적치 발표(2016.12.23.)'

(채무증권) 중앙 비금융공기업에서는 순이익 및 여유자금의 증가로 인한 금융부채의 상환으로 한전 및 발전자회사(△2.6조원), 한국철도공사(△2.0조원) 등에서 감소하였으며, 지방 비금융공기업의 경우 경기도시공사(△1.0조원), SH공사(△0.5조원) 등의 채무증권이 감소하였다.

(차입금) 중앙 비금융공기업에서는 LH(△4.2조원), 한국전력공사(△2.4조원), 한국가스공사(△2.3조원) 등의 차입금 감소가 발생했으며, 지방 비금융공기업의 경우, 인천도시공사(△0.6조원), 서울메트로(△0.3조원), 용인도시공사(△0.3조원) 등의 차입금이 감소하였다.

### 5) 추세 분석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국가채무(D1), 일반정부부채(D2), 공공부문부채(D3) 규모 및 GDP 대비 비율은 대부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GDP 대비 비율\*의 경우 그 증가 추이가 점차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비금융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에서 감소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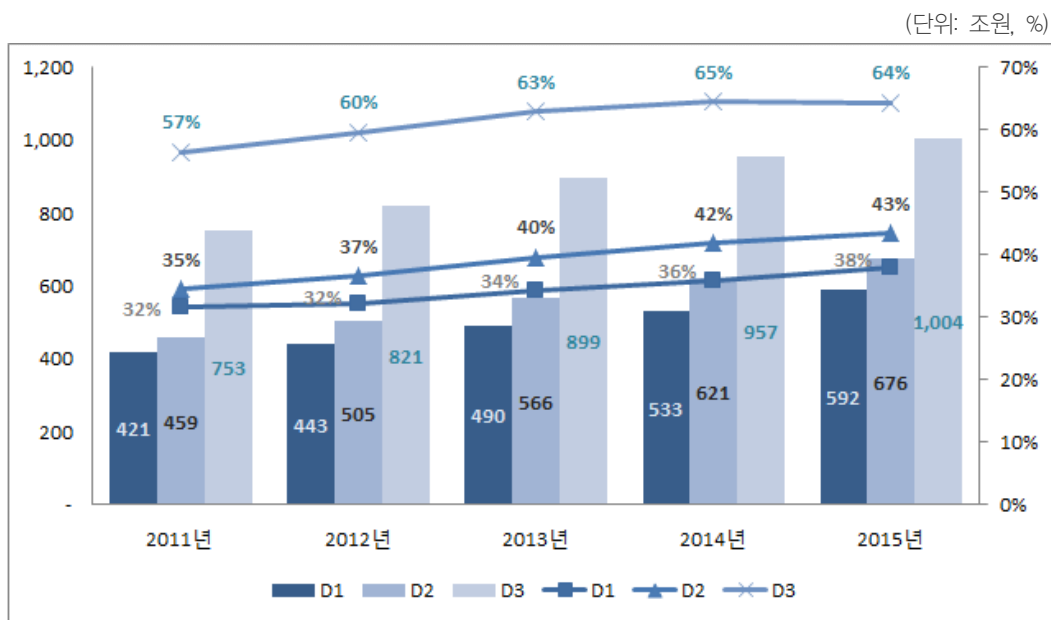
\* 부채 유형별 GDP 대비 비율 증감

국가채무(D1) : ('12년) 0%p → ('13년) 2%p → ('14년) 2%p → ('15년) 2%p

일반정부부채(D2) : ('12년) 2%p → ('13년) 3%p → ('14년) 2%p → ('15년) 1%p

공공부문부채(D3) : ('12년) 3%p → ('13년) 3%p → ('14년) 2%p → ('15년) △0.1%p

〈부채 유형별(D1, D2, D3) 연도별 추이〉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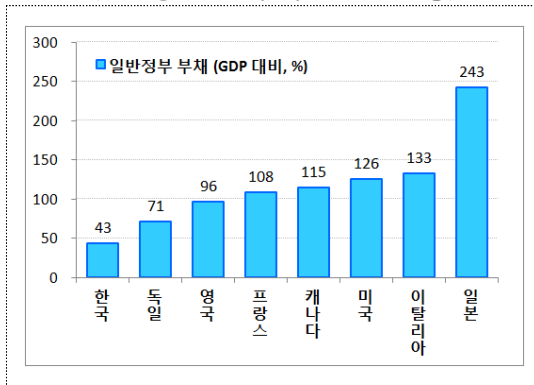
### 라. 국제 비교 및 공시

국가 간 재정건전성 비교 시에는 주로 일반정부 부채(D2)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우리나라는 2015년 GDP 대비 43.4%로 OECD 국가 중 낮은 수준을 기록하여, 우리나라의 부채 수준 및 재정 건전성은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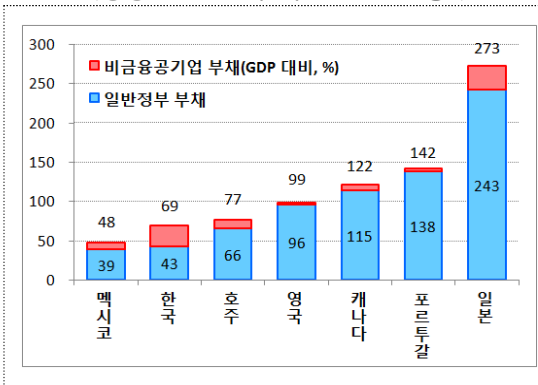
공공부문 부채(D3)는 현재 OECD 국가 중 일반정부 부채와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모두 산출하고 있는 국가가 7개에 불과하여 정확한 국제비교가 어렵지만, 일본, 캐나다, 영국 등 주요국에 비해 양호한 편이다.

다만, 비금융공기업 부채 규모가 공공부문 부채(D3)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편(38%)으로 금년의 경우 최초로 비금융공기업의 부채규모가 감소(9.6조원)되었으나, 앞으로도 지속적인 부채 관리가 요구된다.

〈일반정부 부채(D2) 주요국 현황〉



〈공공부문 부채(D3) 산출국 현황\*〉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5년 공공부문 부채(D3) 실적치 발표(2016.12.23.)'

\* 공공부문 부채(D3) 내부거래를 제거하지 않은 통계(OECD)로, 한국의 경우 내부거래 제거시 64.4%

한편, 매년 작성된 공공부문 부채는 OECD에 제출되어, OECD Statistics에 공시되고 있다.

## 05

## 오피니언(1)

## 국가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 5주년 성과와 향후 발전 방안



이종운 \_ 감사원 교수

지난 12월 2일 국회에서 승인한 내년도 정부예산이 400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2011년도 예산이 300조원을 돌파한 이후 6년 만의 일이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서 아픈 기억이면서 동시에 정부 재정개혁의 시동을 거는 계기가 되었던 외환위기에 따른 IMF로부터의 구제금융 지원이 개시된 1998년도 예산이 약 70조원대임을 감안하면 지난 20여 년간 우리나라 정부의 재정규모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재정규모가 확대된다는 것은 정부가 국민을 위해 투입하는 재정사업의 규모, 즉 정부규모가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정부의 재정규모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국가가 발전하고 있다는 간접적인 증거이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 사회의 투명성이 확장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민간부문은 물론 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 회계정보의 투명성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 경제구조의 개혁을 추진하면서 국가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후의 도입과정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부는 국가 재정 운용방식의 큰 틀을 OECD에서 권고하고 있는 성과주의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1)프로그램 예산제도 2)예산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 3)사업·성과계획서 및 중기재정운용 계획제도 4)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하는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였다. 이어서 약 6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2004년에 재정운용 관련 제도에 대한 본격적인 개혁을 시작하여, 2009년 「국가회계법」에 의거하여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시행하였고 2010년에는 현재의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의 전신인 ‘국가회계기준센터’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2012년에는 2011회계연도에 대한 국가재무제표가

국회에 최초로 제출되었으며, 2014년에는 국가회계편람을 발간하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가회계 제도에 관한 기본 체계를 확고하게 정비하였다.

우리나라 국가 발생주의 회계제도는 2009년 「국가회계법」의 시행을 기준으로 할 경우 2016회계연도 현재까지 7년이 경과되었고, 그동안 현금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예산회계방식에 의한 세입·세출결산서가 중심이 되었던 국가결산보고서에 국가 재무제표가 포함되어 국회에 제출하기 시작한 2011회계연도 기준으로는 현재까지 5년이 경과되었다. 그동안 정부는 국가결산을 위하여 중앙정부 각 소관의 결산 담당자 등에 대한 발생주의 결산교육 및 재무정보 생산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며, 감사원은 같은 기간 동안 중앙정부 및 각 소관별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검사를 실시하여 왔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국회의 결산승인으로 확정된 중앙정부 발생주의 재무정보는 현재 국내·외에 완전하게 공시되고 있다.

국가회계에 발생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재무회계(financial accounting)를 도입하는 것은 다양한 관점에서 의미가 있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복식부기와 결합된 발생기준 회계는 중앙 부처 각 소관별 정책사업에 해당하는 예산구분 상의 각 ‘프로그램(program)’에 대한 재정운용의 효율성(efficiency) 평가와 직접 관련이 있는 원가(cost)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2009회계연도부터 적용되고 있는 프로그램예산을 기반으로 하는 중앙정부의 각 소관별 정책사업(과거의 ‘항’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해당 프로그램(사업)의 원가 집계 및 사업성과 측정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발생주의 회계기준은 세입·세출을 기반으로 하는 예산회계(budgetary accounting)에서 법적인 관점에 기반을 두고 있는 재정상태표상의 자산·부채·순자산에 관한 정보를 산출하게 함으로써 경제적 실질에 기반을 둔 재정 상태를 파악하고 재정건전성 등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다양한 재무 분석 정보의 생산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OECD회원국으로서 재무회계 방식을 적용하여 국가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는 다른 회원국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재정지표를 산출함으로써 재정상태 등에 대한 국가 간의 비교가능성을 확보하게 되어 국가재정의 국제적 신뢰성이 강화되는 효과를 갖게 된다.

국가 재무제표가 작성되어 국회 결산보고가 이루어진 지난 5년간의 개혁성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국가 재무회계제도의 도입은 그간 소홀히 다루어졌다고 평가되고 있는 연금충당부채와 같은 국가부채의 잠재적 심각성을 국민에게 알림으로써 공무원연금제도의 개혁 등 재정지출 가능성이 높은 미래의 잠재적 부채를 포함하는 중장기 재정건전성에 초점을 맞춘 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국가가 보유 및 유지관리하고 있는 방대한 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한 자산 실사를 통한 공정가치의 측정은 물론 그동안 장부상에 인식되지 않았던 자산들이 재무제표에 인식되고 향후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점도 중요한 성과 중의 하나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과거 「예산회계법」(현, 「국가재정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등 개별법에 따라 채권·채무 확정주의만을 기준으로 별도의 장부에 기록되던 내역들을 경제적 실질의 관점에서 자산·부채의 개념으로 확대하여 재무제표의 작성에 포함됨에 따라 나라살림을 종합적·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의사결정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우리나라가 발생주의 국제기준(GFSM 2001)에 부합하는 회계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다른 나라와의 국제적 비교를 통한 국가재정의 체계적 관리 가능성을 제고하고 국가 재정통계의 대외 신뢰도를 높였다는 점도 중요한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주의 재무정보를 포함한 국가회계 결산보고서가 방대한 분량에 비하여 그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 또한 이해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회나 중앙정부의 의사결정에 활용되는 사례가 당초 기대했던 수준을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이 재무제표 결산검사를 수행함에 있어 주요 선진국과 같은 감사절차의 이행(engagement audit)과 감사의견(audit opinion) 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국가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 측면에서 다소 한계가 존재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재무보고와 관련된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모범기준(best practice) 등의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어서 아직도 국가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체계적이면서도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으로는 국가회계정보를 생산하는 담당인력의 전문성이 아직까지 충분하게 확보되지 않은 점도 국가회계제도의 도입과 함께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주요 문제점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발생주의 회계정보가 현재 병행 운용되고 있는 예산회계제도만으로는 제공하지 못하는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재정의 건전성과 대외 신인도를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간의 국가회계제도에 대한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동시에 현행 국가회계제도에 대한 현주소를 좀 더 상세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1인당 GDP가 3만달러를 넘는 OECD 국가들을 살펴보면, 이 국가들은 1980년대 중반 이후 복지 관련 재정을 포함하여 국가의 재정규모가 급속도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정부 지출의 비효율성 지속 등 정부 역량 증대 노력의 미흡과 재정 팽창에 비례하는 국가부채의 증가 등으로 인한 심각한 재정 스트레스를 경험한 바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 경제적 자원 활용의 비효율성 등이 국가 발전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했던 경험들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국가 재정 및 경제적 자원 관리와 관련하여 재정 스트레스 경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재정정보로서 국가회계제도 및 운용을 더 지혜롭게 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가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미래 발전 방안을 다음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공무원 선발제도에 회계직렬을 신설하고 현재의 다양한 입직 경로를 활용하여 국가회계 관리 인력을 전문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의 노력으

로 현행 행정직렬 내에 회계직류를 설치하여 회계업무 수행 인력을 선발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 선발인원이 매년 극소수이고 실무자급(7급, 9급)만을 선발하여 회계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요구되는 많은 개선 사항을 추진하는 데 상당한 한계가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2016년의 경우 국가공무원 선발인력 중 회계직류 선발인원은 7급 공채 5명, 9급 공채 4명 등으로 극히 소수의 실무자급 인력만을 선발, 배치하여 국가 회계관리 전문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하여, 민간경력채용 등 현재의 다양한 공무원 채용 입직 경로를 활용하여 국가 회계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충원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향후 국가회계정보의 활용도 제고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전문임기제 공무원과 개방형직위 등 현재의 다양한 공무원 채용 제도를 활용하여 5급 이상의 관리자급 회계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도 국가회계관리 인프라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회계관리 인력의 전문화 기반을 중장기적으로 마련하는 것은 각 부처 및 회계 관서 내에서 생산되는 회계자료의 무결성(integrity)을 강화하여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본다.

둘째, 국가 재무회계정보가 이용자 중심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는 활성화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 등 관련 기관이 국가회계정보에 대한 회계정보 이용자들의 이해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행 국가 및 각 회계 소관별 재무정보의 구성요소 및 재무제표가 방대한 양과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회계 전문가조차도 이용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기업의 재무제표와는 화폐단위의 숫자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단위를 표시하고 있는 국가 재무제표가 원 단위까지 재무정보를 표시하고 있어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가독성에 한계를 느낄 수도 있다. 따라서 국가 및 회계 소관별 재무정보에 대해 국민 등 정보이용자에게 정보 활용가치와 이해가능성이 높은 재무분석 정보를 개발하여 해당 정보를 주기적으로 국민에게 공시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또 한편으로는 국회 및 유관기관의 국가회계에 대한 이해 및 관심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시민단체 등에 대해 다양한 국가 재무분석 정보 등의 제공을 활성화하여 일반국민들의 관심도 역시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민의 대의기관 등 직접적인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라고 할 수 있는 주요 프로그램(정책사업)별 원가차이분석 등 국가 자원의 활용성과를 다양하게 분석하여 제공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같은 맥락에서, 재정건전성 관리(연금충당부채, 국가부채 등) 등 주요 자산 및 부채 관련 회계이슈에 대해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해도가 높은 설명적인 재무정보를 작성하여 언론매체 등 다양한 경로를 활용하여 국가 재무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국가의 자산-부채 관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국가채권관리법」 - 「재정건전화법」과 재무정보의 연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채권관리기능의 국가채권관리법 및 재정의 중장기적 지속가능성 확보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재정건전화법」(2017년 1월 시행) 적용 시 재무정보를

연계함으로써 국가 자산 및 부채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해당 법령에 의한 법적 관점에서의 형식적인 요건의 완성을 전제로 하는 채권-채무 관리와 함께 경제적 실질에 기반을 두는 재무적 관점에서의 자산-부채 관리를 연계할 수 있는 정보를 개발하여 국가 자원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프로그램 예산제도에서의 원가정보기반 성과주의 재정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원가정보를 정책사업별 평가지표에 연계하고, 성과에 따른 예산편성을 통해 국가회계정보의 환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관리제도는 사실상 형식적으로만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예산 총액배분자율편성 (Top-Down)제도 역시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위해 필수적이거나 아직도 목-세목 중심으로 운용되는 소위 ‘칸막이식’ 관행이 탈피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는 재무정보 기반 재정성과를 측정·평가할 수 있는 제도를 조속히 확대 시행하여 범정부적인 성과주의 재정운용 활성화를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현행 ‘통계목’으로 분류되고 있는 원가정보를 활용한 효율성 평가 및 의사결정에 활용 가능한 핵심지표를 개발하고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재무정보를 산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무분석 기능을 탑재한 재정정보 분석기능이 포함되도록 현행 국가재정정보시스템(dBrain)을 확대 개편하는 과업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국가회계교육을 체계화하고 고위공무원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공무원의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구, 중앙공무원교육원)과 각급 부처에 소속된 각 부처별 공무원교육원을 운영하여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 소속의 감사교육원을 제외하고는 국가회계와 직접 관련된 전문교육을 별도의 독립된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교육원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정부 각 부처 내에 회계 전문인력의 확보가 미흡한 상황에서 행정직 등의 공무원을 회계직으로 임명하여 국가 회계업무를 처리하면서 회계와 직접 관련된 전문교육을 소홀히한다면 국가 회계업무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와 함께 현행 프로그램(정책사업) 중심의 예산제도하에서는 예산 실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 함께 각 정책사업에 대한 의사결정과 그 사업관리에 책임이 부여된 고위공무원들에 대한 재정 및 회계관리 교육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고위공무원에 대한 재정 및 회계관리 교육도 사실상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는 향후 공무원들에 대한 체계적·지속적 국가회계교육을 통해 업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고, 특히 중앙관서 고위공무원에 대한 국가 재정 및 회계교육의 강화를 통해 국가 자원을 효율적,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자의 인적 역량을 제고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의 위상을 제고하고 현재의 업무영역을 전략적·차별적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국가회계제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 국가회계 및

재정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가회계 관련 업무 지원 및 재정통계 관련 정책 연구를 위한 전문기구로서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요구된다. 세무 업무영역 중에서는 재정통계(지표) 관리 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해외 발생주의 재정통계 작성기준을 지속적으로 검토·보완하고, 다양한 재정통계(지표)의 산출 및 관리 업무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국가별 국가회계지표 비교분석 결과를 예측하여 이를 기준에 반영해야 하며 이를 위해 기준관련 업무와 재정통계 업무 간 연계를 통한 조정이 요구된다. 입력관리 업무는 작성단위의 책임(입력정확성 측면)을 강화하고 현재의 업무 수준이 유지된다는 전제하에서 점차 기능을 축소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2015회계연도 말 현재 국유재산과 물품 등을 총괄하는 국가의 자산은 약 1,856조원, 그리고 국가채무 등과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한 국가 부채는 약 1,285조원으로 보고되고 있다. 반면에 감사원의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에 따르면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 즉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금의 채무를 제외한 중앙정부의 채무는 2015년 말 현재 약 557조원으로 보고되고 있어 국가재무제표에 표시되어 있는 국가 부채 중 법령에 의해 정부가 국가 채무로 계상하고 있는 비중이 약 43.3%임을 알 수 있다. 정부가 만일 이 43.3%에 해당하는 좁은 의미의 채무만을 인식하면서 국가 재정사업의 시행과 관리를 확장하게 된다면 장래에 발생 가능한 국가 재정관리상의 잠재적 리스크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발생주의 회계를 기반으로 경제적 실질의 인식기준을 통해 국가부채를 측정하고 이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관리하는 것은 국가의 발전단계에 따라 점점 더 확장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의 국가재정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정부가 중요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 재정의 방만한 운영을 최소화하고 재정사업의 효율성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원가 정보에 기반을 두는 발생주의 재무정보를 통해 적용 가능한 자산-부채의 관리 기법을 정부 각 사업단위에 확장 적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발생주의 회계정보를 통해 분석된 우리나라 정부의 자산 대비 부채 비율, 즉 재정 건전성은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정부가 국가회계에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가 재정통계의 대외 신뢰도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평가들을 종합해보면, 정부가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를 도입, 시행하는 것은 분명히 순기능의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앞으로 1인당 GDP 3만 달러 시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1인당 GDP 3만 달러 시대에서는 그 국민 소득수준에 걸맞는 국가 재정사업의 확장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국가의 재정 및 회계 관리도 그에 부합되도록 그 내용과 역량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수 있는 전략과 의지가 지속적으로 확충될 필요가 있다.

## 05

## 오피니언(2)

## 국가회계의 독립성 확보가 왜 중요한가?



임동규\_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무회계팀장

## 1 배경

2011년 정부는 정부재정에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본격 도입하였다. 발생주의는 비록 현금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경제적 거래가 발생하면 그 시점에서 자산·부채 등을 인식하여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발생주의는 동일 회계연도 내에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키는 등 재정을 합리화시킨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발생주의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과 같이 지금 비록 지출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미래에 지출의 발생이 확실하므로 현재 시점에서 그 비용의 현가를 산출하여 재무제표에 인식(계상)한다. 이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반영하는 등 정부의 재정통계 관리의 범위를 확장시키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가져 온다.

정부 부문에 발생주의를 도입한 지 5년이 지났다. 5년이 지난 만큼 지난 5년 동안 재정의 성과는 무엇이고, 향후에는 지난 5년과 다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간 발생주의 도입의 성과는 자산·부채 규모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국제적 추세에 부합하는 재정통계 산출 등 재정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공무원연금충당부채 등 미래에 발생하는 부채에 대한 통계위험 관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2015년 공무원 연금 개혁이 추진되는 등 재정관리가 한층 고도화되었다고 생각한다.

발생주의 도입은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 추진의 계기가 되었다. 2011년 이후 국가재무제표에 부채로 인식 계상되어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던 연금충당부채가 '14회계연도 들어 643.6조원으로, 총부채(1,212.7조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초과함에 따라 연금 개혁의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마침내 국회를 거쳐서 2015년 연금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또한 '15년 공무원연금 개혁의 결과로서 '15회계연도 공무원연금충당부채의 증가폭이 예년에 비해 대폭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 왔다. 이와 같이 연금개혁 실시와 충당부채의 증가폭 감소는 국가재정 전반에 발생주의 회계의 도입을 통해 재정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 앞으로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간 추진된 국가회계법령, 회계기준, 디브레인 회계 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과 재무제표 작성의 내실화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국민이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가치 있는 회계 및 재정정보를 생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발생주의 도입 5년이 지난 시점에서 과거와 미래로 나누어 성과와 한계를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해 보는 것이 시의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와 함께 세미나를 추진하게 되었다. 주로 실무적인 추진과정 중심으로 말씀 드리겠다.

## 2 준비 과정 상

5월부터 세미나를 준비하였다. 우선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와 기재부 실무자들로 구성된 실무 T/F팀(11명)을 구성하였다.

T/F팀은 국가재정담당 사무관과 센터 팀장 등 실무자가 참석하여 세미나의 주요 현안에 대해 검토하고 주제, 규모, 범위, 예산, 일정, 추진 방안 등에 대해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기본 프레임을 갖추도록 하였다.

다만 아직 국가결산보고서(5월 말 국회제출) 작성이 완료가 되지 않았던 시점이라, 세미나 개최 준비에 역량을 집중하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준비기간이 길어진 만큼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자유롭게 논의함으로써 기획의 경직성을 탈피할 수 있는 이점도 있었다. 기획 초기에 준비기간이 짧은 관계로 추진이 어려웠지만, 국제적 규모의 회의로 격상하여 개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되었다.

국가결산 업무가 종료된 6월부터는 실무자 회의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가다듬어 세미나에서 논의할 성과와 한계, 미래 발전방안에 대한 주요한 내용을 선별하고 일정에 대한 초안을 작성하여 6월 중순경 기본 프레임을 확정하였다.

6월에는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님의 제안으로 기재부,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국가회계제도 심의위원(민간), 학계 등이 포함된 세미나 준비 추진기획단(15명, 준비위원장 주인기 교수, 섭외 부위원장 김이배 교수, 연구 부위원장 정석우 교수, 실무추진 소광문 기재부 사무관, 김은영(한국조세 재정연구원 국가회계팀장)을 구성하여 6.13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평균 주 1회 실무회의를 진행하였다.

추진기획단 초기 회의에는 기재부 담당 사무관이 참석하여 세미나의 컨셉, 흐름, 부각해야 할 논점 등 통일적 관점에서 세미나가 진행 될 수 있도록 조율하였는데, 기획단 단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로 인해 기대했던 것보다 다양하고 훌륭한 아이디어가 도출될 수 있었다.

7~8월에는 수차례에 걸친 추진기획단 회의와 내부 보고 등을 통해서 세미나 개최일시·장소를 확정하고 '중앙정부 발생주의 재무정보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연구용역도 발주하였다.

세미나의 Running time이 끊어지지 않도록 시간과 분 단위로 구분하는 등 세미나에서 발생할 있는 여러 문제들(참석 및 발표시간, 장비 결함 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점검하였다.

뿐만 아니라 추진기획단 단원의 인적 네트워크를 충분히 활용하여 국제 공공회계분야에서의 우수한 해외인사들에 대해 접촉하고 초청(발표)자를 선정할 수 있었고 국회 예결위원장, 예정처장, 감사위원 등 각계 전문가를 대표한 주요 인사들도 용이하게 섭외할 수 있었다.

바쁜 업무 속에서도 순조롭게 세미나 준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추진기획단의 기여가 컸다고 생각한다. 추진기획단의 회계·재무에 관한 전문지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함으로써 컨텐츠 측면에서 보다 충실한 토론의 질을 확보하고 홍보의 효과도 최대화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9~10월에는 발표 주제 및 축사·기조연설·좌담회 등 세미나의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어 나갔고, 아울러 국가회계에 관하여 전문가 언론 기고도 추진하였다. 행사 전에 미리 홍보를 실시하여 입체적이고도 전면적으로 세미나의 효과를 극대화해 보자는 취지였다. 이는 기재부와 조세연의 세미나 실무회의에서 나왔던 아이디어 중의 하나로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었다고 생각된다.

### 3 준비 과정 下

11월에는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님 주도로 세미나가 진행되는 현장(여의도)에서 미리 2회에 걸쳐 리허설을 진행하였다. 그동안 많은 주목을 받지 못했던 회계분야에서 오랜만에 비교적 규모 있게 개최하는 행사이기에 마지막까지 노력을 다 하였다.

때로는 기재부와 조세연의 협업을 통해, 때로는 주최자인 조세연이 자발적으로 업무를 분담하여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두고 두고 기억에 남을 만 하다고 생각된다.

동시에, 6개월여를 준비해오면서 이미 국가회계 성과 홍보라는 소기의 목적은 각계의 참여와 신문 기고 등을 통해 충분히 달성되었다고 생각했다. 내부적으로는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와 기재부가 세미나 행사 추진을 통해 국가회계의 중요성을 충분히 공유하였고, 외부적으로는 국회 예결위원장 등 각계 주요인사의 세미나 참석을 통해 국가회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세미나를 통한 종합적인 성과에 대해 전문가와 공유하고 적극 어필하면서, 향후 도전 과제에 대한 동력을 조금이나마 획득할 수 있었던 것 같다.

행사 당일엔 모든 스태프들은 각기 맡은 바 임무에 따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세미나를 진행시켰다. 행사는 계획된 대로 개회사, 축사, 기조연설, 주제발표, MOU체결, 좌담회 등 모두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세미나는 당초 예상했던 100여명을 훌쩍 뛰어넘어 200여명이 행사에 참가하여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진행이 너무 순조로워서, 행사 후 조세연의 어느 분은 세미나가 마치 '회계'라는 주제로 클래식 교향악을 연주하는 것과 같은 감동에 휩싸였다고 말씀해 주셨다. 행사를 주최하였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 및 여러 직원, 준비위원회 교수, 그리고 우리 기재부 사무관 등 모두가 협업하여 일궈낸 멋진 행사였다고 생각한다.

### 4 마치며...

이번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이유를 되짚어 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역시 '협업'이라 할 수 있다. 기재부와 조세재정연의 협업, 그리고 민간 대학교수로 구성된 추진기획단과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가 도출될 수 있었다. 이는 정부·국회·민간 모두에게 '국가회계'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는 한편 미래 국가회계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로 작용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 국가회계 5주년의 성과와 함께, 향후 나아가야 할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학계·언론 등의 소중한 의견들이 있었다. 세미나에서 공통적으로 발굴된 주제인 ① 원가정보 활용 사례 및 원가지침 개선 연구 ② 예산편성 환류 방법 연구 ③ 발생주의 정보를 활용한 성과평가 방법 연구 ④ 발생주의 재정지표 개발 및 활용 방법 연구 ⑤ 고위공직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책연구 범위 및 방법을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

2016년은 국가회계, 나아가 국가재정,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제 발전을 위하여 정부, 연구기관, 학계가 머리를 맞대어 고민해 보는 의미 있는 한해가 되었던 것 같다. 개인적으로 보면 현장 중심에서 발로 뛰는 한해가 되었다.

세미나 성공을 위해 노력해 주신 추진기획단, 관련 분야 학계 교수들, 야근 및 주말 근무까지 마다하지 않고 애를 써 주신 조세재정연 직원 여러분들과 기재부 담당 사무관, 특히 세미나 행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맨 앞에서 세미나 행사를 진두지휘해 주신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정도진 소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06

## 센터 동향

### 1 국가회계재정통계자문위원회 개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제20차 국가회계재정통계자문위원회를 12월 16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PEMNA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자문위원회에서는 ‘국가회계재정통계 운영규정 개정사항’을 보고하고, ‘자산재평가 회계처리개선’, ‘국가회계예규 선진화 방안’, ‘2017년 재정네트워크 정부회계 분과 연구 주제 공모’ 등 3개 안건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국가회계재정통계자문위원회(12.1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PEMNA 회의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자문위원회 구성을 9인에서 15인으로 확대하고 국내외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국가회계재정통계자문위원회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2016년 5월에 위촉한 Andreas Bergman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PSASB<sup>1)</sup>) 전임 의장에 이어, 주인기 국제회계사연맹(IFAC<sup>2)</sup>) 차기회장 및 Ian Ball 공공부문회계사협회(CIPFA<sup>3)</sup>) 국제부문 회장 등 국제기구 전문가

1)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PSASB: 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Board)

2) 국제회계사연맹(IFAC: International Federation of Accountants)은 전 세계 공인회계사를 대표하는 국제기구로 131개국 180개 회계전문단체가 가입해 있다. 국제감사기준, 국제윤리기준,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 등 회계 관련 제 기준에 대한 독립적 제정기구이다.

3) 공공부문회계사협회(CIPFA: Chartered Institute of Public Finance and Accountancy)는 영국에 소재하고 있으며 공공부

들을 자문위원으로 신규 위촉하였다. 이번 신규 자문위원 위촉은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의 국제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2 5주년 기념 세미나 준비위원회 회의 개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중앙정부부문 발생주의 도입 5주년 기념 세미나’의 성공적인 개최와 사전 홍보를 위한 준비위원회를 발족하여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7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였다.

〈국가회계제도 개선 T/F 회의 개최 현황〉

구분	회의 내용	비고
1차	6월 13일(월) • 세미나 개최 준비위원회 Kick-off / 5주년 기념 행사 개최 계획(안) 보고	전체회의
2차	6월 30일(목) • 참석내빈 및 언론사 섭외 관련 논의 / 위탁연구용역 연구과제의 착수보고	섭외소위
3차	7월 18일(월) • 5주년 세미나 개최준비 상황 보고 / 연구 용역 FGI·설문조사 의견 수렴 • 브로셔 및 알기 쉬운 국가회계 소책자 의견 수렴	전체회의
4차	8월 24일(수) • 참석내빈 및 좌담회 구성 / 언론사 홍보 방안 등 논의	섭외소위
5차	9월 9일(금) • 5주년 세미나 개최준비 상황 보고 / 연구 용역 발표 주제 1차 중간 보고	연구소위
6차	10월 14일(금) • 브로셔 및 알기 쉬운 국가회계·알기 쉬운 재정통계 소책자 시안 보고 • 연구 용역 발표 주제 2차 중간 보고	전체회의
7차	11월 2일(수) • 5주년 세미나 개최 준비 최종 보고 / 연구 용역 발표 주제 최종 보고	전체회의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와 준비위원회는 세미나 개최계획과 발표 주제, 해외인사 초청, 참석귀빈 및 좌담회 구성 등 섭외에 관한 사항, 언론사 홍보(전문가 기고)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세미나 준비를 진행하였다. 10월 14일과 11월 2일에 개최된 회의는 세미나에서 발표될 위탁연구용역 과제에 대한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를 겸하여 개최되었다.

문 영역에서 활동하는 회계사 및 회계업계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공공부문 회계를 선도하고 있다.



〈5주년 기념 세미나 준비위원회(10.1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PEMNA 회의실〉

### 3 「중앙정부 발생주의 재무정보의 현재와 미래」 연구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 개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한국회계학회에 위탁한 「중앙정부 발생주의 재무정보의 현재와 미래 연구」의 중간보고회를 9월 9일과 10월 14일 2차례에 걸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PEMNA 회의실에서 개최하였으며, 중간보고의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11월 2일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 연구는 중앙정부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도입 이후 현재까지의 운영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미래의 발전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발생주의 국가회계의 도입 및 활용성과를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위탁연구 2차 중간보고회(10.1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PEMNA 회의실〉



〈위탁연구 최종보고회(11.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PEMNA 회의실〉

「중앙정부 발생주의 재무정보의 현재와 미래 연구」는 공공부문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에 관한 이론적 프레임워크를 조사하고, 중앙정부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성과에 대한 문헌조사와 도입성과 측정을 위한 전문가 그룹 인터뷰(FGI: Focus Group Interview) 및 설문조사 등을 수행하여 중앙정부 발생주의 회계제도 운영 성과를 평가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발전방안을 제시하였으며, 11월 11일 개최된 ‘중앙정부부문 발생주의 도입 5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 4 한국정부회계학회 토론회·한국회계정보학회 추계학술대회 참석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10월 7일 부천시청 소통마당에서 개최된 한국정부회계학회 토론회의 3세션에 참석하였다. 3세션의 주제인 ‘정부부문의 합리적인 간접원가 배부에 관한 연구’는 행정형 회계의 간접원가를 프로그램별로 배부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로 김이배 덕성여대 교수가 발표하였다. 또한, 토론자로 참여한 고창열 제주대 교수, 문광민 대전대 교수, 윤성일 연세대 교수, 정창훈 인하대 교수, 박지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연구원은 연구 내용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11월 12일 숭실대학교에서 개최된 ‘2016 한국회계정보학회 추계학술대회’에 참석하였다. 정도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과 김은영 국가회계팀장은 각각 ‘발생주의 국가회계의 연구현황과 미래’, ‘청년일자리사업원가분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국가회계 및 재정통계 관련 이슈에 대해 유관 학술단체, 외부전문가들과의 교류를 더욱 확대하여 업무역량 강화는 물론 정책 동향 분석 및 성과 홍보에 활용할 계획이다.

## 5 한국회계학회 2016 동계학술대회 국가회계세션 운영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12월 17일 서울 연세대학교 경영관에서 개최된 ‘한국회계학회 2016 동계 학술대회’에서 국가회계세션을 운영하였다. ‘재무정보의 유용성 제고방안’이라는 주제로 운영된 국가회계세션은 ‘발생주의 국가회계의 연구현황과 미래’, ‘발생주의 국가 재무정보의 현재와 미래’, ‘활용성 제고를 위한 국가결산보고서 개선방안 연구’ 등 3개의 주제발표가 있었으며, 회계 관련 학계 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석하여 큰 관심과 호응을 보여주었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국가회계와 재정통계의 산출 정보를 알리고, 이를 활용한 연구 활성화 독려 및 회계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앞으로도 꾸준히 학회에 참여할 계획이다.



〈한국회계학회 2016 동계학술대회(12.17), 연세대학교〉

※ 각 주제별 발표 및 토론 내용은 본 뉴스레터 「『한국회계학회 2016 동계학술대회(국가회계세션) 결과』 참고

## 6 「국가회계 도입 5주년 성과와 과제 - 발생주의, 재정의 미래를 열다」 세미나 개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11월 11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 12층 컨벤션홀에서 「국가회계 도입 5주년 성과와 과제 - 발생주의, 재정의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세미나에는 국회 예결위원장, 국회예산처장, 기획재정부 제2차관, 감사위원 등 정책 의사결정자를 포함한 정부 관계자 및 학계 전문가, 언론기자, 공인회계사 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국가회계 5주년 기념세미나(11.11.), CCMM 빌딩 12층 컨벤션홀〉

세미나의 제1부 오프닝 세션은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되었으며, 김현미 국회 예결위원장, 박찬대 국회의원의 격려사에 이어 송연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 김상규 감사원 감사위원, 손성규 한국회계학회장의 축사가 진행되었다. 또한 이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공공부문회계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2부 주제발표 세션에서는 김준기 국회예산처장의 초청연설과 해외 주요국의 발생주의 도입성과 사례(1주제), 발생주의 국가 재무정보의 현재와 미래(2주제),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의 미래 발전방안에 대한 글로벌 좌담회 순으로 진행되었다.



〈국가회계 5주년 기념세미나(11.11.), CCMM 빌딩 12층 컨벤션홀〉

※ 각 주제별 발표 및 토론 내용은 본 뉴스레터 ‘국가회계 도입 5주년 성과와 과제-발생주의, 재정의 미래를 열다’ 세미나 결과’ 참고

## 7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공부문의회계사협회(CIPFA) 업무협약(MoU)체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박형수)과 공공부문의회계사협회(Chief executive: Rob Whiteman)는 11월 11일 국가회계 도입 5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하며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KIPF·CIPFA 업무협약체결 (11.11.), CCMM 빌딩 12층 컨벤션홀〉

공공부문 회계의 발전과 전문가 양성, 상호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업무협약이 체결되었으며, 이 업무협약은 향후 3년간 유효하다.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5주년 기념 세미나에 초청된 Ian Ball 공공부문의회계사협회 국제부문 회장이 공공부문의회계사협회를 대표하여 참석하였으며, 양 기관은 체결된 협약서에 따라 공동연구 등 협력체계를 활용할 구체적인 후속방안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 8 GFSM 2014 도입방안 연구 원내세미나 개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기획재정부 수탁과제인 「IMF 정부재정통계편람(GFSM) 2014 도입방안 연구」의 연구를 완료하고, 원내세미나를 12월 20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원내세미나는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 정도진 소장, 박윤진 팀장, 엄기중 연구원이 참여하였고, 토론자로 공공기관연구센터 조임곤 소장, 연세대학교 문두철 교수가 참여하였다.

원내세미나에서는 「IMF 정부재정통계편람(GFSM) 2014 도입방안 연구」를 통해 GFSM 2014의 개정효과 및 재정통계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였고, 우리나라의 GFSM 2014 도입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제시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IMF 정부재정통계편람(GFSM) 2014 도입방안 연구」를 바탕으로 발생주의 재정통계를 활용한 다양한 지표 분석 등 유용성에 관한 후속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 9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 개선 전문가 회의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와 기획재정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 개선과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11월 23일 관련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전문가회의에서는 정부보조금으로 관계기업투자지분 취득 시 관련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 및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따른 자산·부채 이관 시 회계처리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이아영(강원대), 최연식(경희대), 박세환(한국회계기준원), 손해진(삼덕회계법인)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이번 전문가 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획재정부에 관련 회계처리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였으며, 기획재정부는 센터의 검토결과를 반영해서 기준개선안을 마련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뒤 2017년 1분기 중 개정사항을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 상 회계처리 기준이 없어 자의적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기관별 회계처리의 일관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10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 및 결산교육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12월 22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결산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 및 결산교육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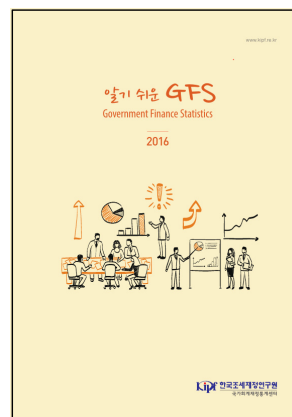
본 교육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결산개요 및 절차, 2015회계연도 결산서 검토결과, 2016회계연도 결산서 작성시 유의사항, 주요 회계처리 및 주석 작성 유의사항 등에 대해 유영찬, 최종갑 회계사의 강의가 이뤄졌으며,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결산 담당자들의 실무에 대한 질의응답도 진행되었다.



## 11 알기 쉬운 GFS 소책자 발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국제통계기준인 GFSM 2001(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 2001)과 PSDS(Public Sector Debt Statistics)에 따라 작성한 일반정부 재정통계와 공공부문 부채통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알기 쉬운 GFS」를 발간하였다.

해당 소책자에서는 국제통계기준에 대한 설명과 발생주의 재정통계의 장점, 도입경과, 재정통계 보고서의 종류 및 예시, 계정과목 해설, 그리고 우리나라 재정통계 산출결과에 대한 분석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 07

## 회의 및 세미나

### 1 「가회계 도입 5주년 성과와 과제 - 발생주의, 재정의 미래를 열다」 세미나 결과

#### 가. 개요

1. 주제: 국가회계 도입 5주년 성과와 과제 - 발생주의, 재정의 미래를 열다
2. 일시: 2016.11.11. (금) 13:20~17:00
3. 장소: CCMM빌딩 12층 컨벤션홀
4. 주최 및 후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주최  
기획재정부·한국회계학회·한국공인회계사회 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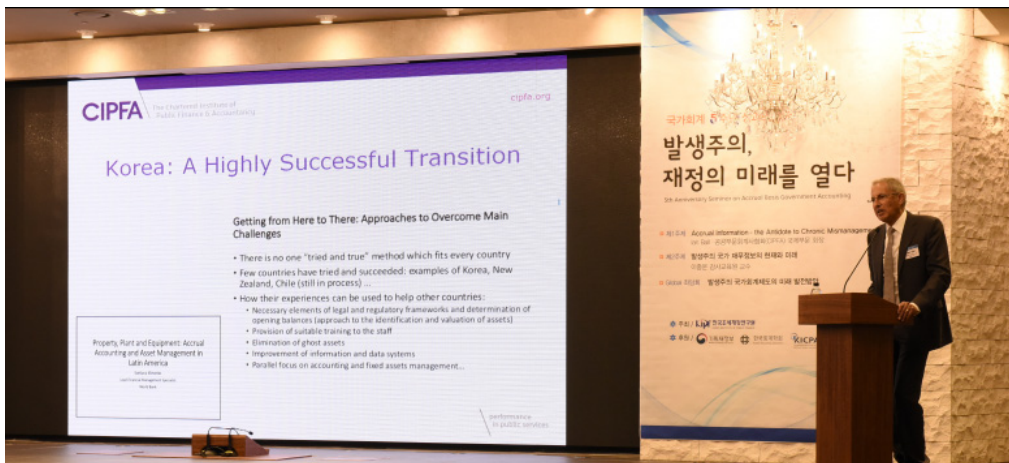
#### 〈주제발표 및 토론〉

- [제1주제] 「Accrual Information - the Antidote to Chronic Mismanagement」  
- 발표자 : Ian Ball(공공부문회계사협회 국제부문 회장)
- [제2주제] 「발생주의 국가 재무정보의 현재와 미래」  
- 발표자 : 이종운(감사원 감사교육원 교수)
- [Global 좌담회]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의 미래 발전방안」  
- 좌장 : 주인기 (IFAC 차기회장)  
- 패널 : 김경호(홍익대 경영학과 교수), 김성준(감사연구원 연구부장), 장경덕(매일경제  
논설위원), 정도진(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  
조용만(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  
Ian Ball(공공부문회계사협회 국제부문 회장), 이종운(감사원 감사교육원 교수)

나. 발표 및 토론 결과 요약

1) (제1주제) 「Accrual Information – the Antidote to Chronic Mismanagement」

- OECD 가입국의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현황 및 7가지 도입목표\*를 소개하고 한국을 매우 성공적인 도입사례로 평가
  - \* ① 회계책임성 강화, ② 투명성 향상, ③ 유용한 수치제공, ④ 재정현황 이해도 제고, ⑤ 사업 전부원가 제공 ⑥ 추가적인 자산·부채 관리정보 제공, ⑦ 행정업무 효율성 증대
- 발생주의 정보는 효과적 재정관리(PFM: Public Financial Management)의 필수 요소이며, 재정 의사결정에 활용될 때 더 유용하다는 점을 강조
- 뉴질랜드와 영국의 비교 사례를 통해 발생주의 기반의 장기재정목표 설정, 재정상태표 건전성 관리 등 발생주의 정보를 이용한 재정관리의 이점 제시



〈국가회계 도입 5주년 기념 세미나(11.11.), CCMM 빌딩 12층 컨벤션홀\_제1주제 발표〉

2) (제2주제) 「발생주의 국가 재무정보의 현재와 미래」

-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 도입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도입당시 기대효과 대비 달성 정도 진단, 미래 발전방향 모색 및 향후 추진과제 제안
- (재정자료 분석에 따른 도입성과) ① 국가재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관리 가능, ② 국가재정의 건전성 예측 및 관리, ③ 발생주의 국제기준 적용으로 해외 신인도 제고
- (FGI·설문조사에 따른 도입성과) ① 국가회계의 신뢰성 및 투명성 제고, ② 국가회계정보의 접근성 제고, ③ 국가회계정보 질적 특성의 긍정적 인식 공유
- (미래발전방향) ① 국가회계정보의 활용 확대, ② 국가회계정보의 이해가능성 제고, ③ 의사결정자 중심의 교육 활성화를 통하여 유용성을 제고, ④ 국가회계인력 전문화, ⑤ 국가회계 전문교육 체계화, ⑥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위상 강화를 통하여 신뢰성 제고
- (단장기 추진과제) ① 발생주의 재무정보를 활용한 정책연구 활성화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발생주의 정보의 성과평가 및 예산편성 환류, ② 국회 및 고위공직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교육 정례화, ③ 회계직렬 등 입직 경로 확대 및 회계관리국 등 총괄 기구 설치 등 제안



<국가회계 도입 5주년 기념 세미나(11.11.), CCMM 빌딩 12층 컨벤션홀\_제2주제 발표>

### 3) (Global 좌담회)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의 미래 발전방안」

- (김경호) 국가회계 도입 성과에 대한 홍보 강화, 대학 교육과정에 국가회계 도입 확대, 공인 회계사 및 회계직 공무원 시험에 국가회계 비중 확대 필요
- (김성준) 지금까지 국가회계의 빠른 안정화를 위하여 노력했다면, 향후에는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결산검사가 수행되도록 노력할 예정임
- (장경덕) 발생주의는 조용히 진행되는 공공개혁의 일환으로 매우 중요. 앞으로 보다 발전하기 위하여 국가회계의 정보접근성과 이해가능성 증진, 국가회계의 적합성 등 개선사항 제시
- (Ian Ball) 뉴질랜드 정부의 회계정보는 매월 언론에서 다루어지며, 국민들은 이러한 정보의 제공에 익숙해지게 되었고 발생주의 회계의 도입은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였다고 생각됨. 따라서 정부는 국민들의 이해 가능성이 낮을 것에 대한 우려를 떨쳐내고 재정정보의 민주화를 위한 발생주의의 정착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임
- (이종운) 정보 생산자 측면에서 실무자뿐만 아니라 정책결정자들을 위한 교육 필요, 회계직렬 확대 등 실무자의 전문성 제고 노력 필요. 정보 이용자 측면에서 숫자의 단순한 나열보다는 좀 더 다양한 형태의 요약 정보가 제공될 필요
- (조용만) 발생주의가 도입된 지 5년이 된 시점에서 이제는 원가정보를 활용하여 사업평가나 사업관리에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함. 회계를 잘 모르는 공무원이나 회계정보를 활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쉽게 수용 가능하기 위하여 공공에 적합하도록 간소화하고 알기 쉽게 정보를 제공할 필요
-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이 일반국민이나 국회의원의 관심이 적은 것은 사실임. 하지만 현재는 관심이 적지만 향후에는 국가의 재정을 건전화시킬 중요한 도구이기에 ‘소리 없는 개혁’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러므로 현재 활용가능성이 낮고 내용이 어렵다고 해서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도입효과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됨

- (정도진) 지난 5년간은 회계정보의 정확성을 중심으로 연구를 하였다면 앞으로는 활용성을 중심으로 연구 필요. 이를 위해 내년에는 성과평가와 예산에의 활용을 중심으로 기본연구 과제를 수행할 예정임. 학계와 업계에서도 공공분야 회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하며, 센터도 원내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하여 좋은 산출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음



<국가회계 도입 5주년 기념세미나(11.11.), CCMM 빌딩 12층 컨벤션홀\_Global 좌담회>

## 2 한국회계학회 2016 동계학술대회(국가회계세션) 결과

국가회계분야 연구성과물 확산 및 전문가 저변 확대 등을 위하여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한국회계학회 2016 동계학술대회’에서 ‘국가회계세션’을 운영함

### 가. 개요

1. 주제: 발생주의 국가회계 재무정보의 유용성과 활용
2. 일시: 2016.12.17.(토) 16:15~17:45
3. 장소: 연세대학교 경영관(B201)
4. 주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한국회계학회 동계학술대회 국가회계세션)

### 〈주제발표 및 토론〉

- [주제1] 발생주의 국가회계정보의 질적특성에 관한 연구(이종운, 감사원 교수)  
 - 토론자 : 전규안(숭실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배기수(충북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최연식(경희대 회계·세무학과 교수)
- [주제2] 재무정보 활용성 제고를 위한 국가결산보고서 개선방안(진태호,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전문연구원)  
 - 토론자 : 윤재원(홍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김주희(감사연구원 연구관),  
 박성민(지방회계통계센터 제도연구팀장)
- [주제3] 발생주의 국가회계 재정정보의 유용성과 활용(정도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



〈한국회계학회 동계학술대회(12.17), 연세대학교 경영관〉

## 나. 발표 및 토론 결과 요약

첫 번째 주제인 「발생주의 국가회계 질적특성에 관한 연구」는 이종운 교수(감사원)가 발표하였다.

본 연구는 중앙정부의 각 부처에 소속되어 있는 국가회계 실무담당자와 각 부처의 결산업무를 직·간접적으로 수행한 경력이 있는 공인회계사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발생주의 국가회계정보의 질적특성(충실성, 접근성, 이해가능성, 신뢰성, 투명성)이 국가회계정보의 유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주제발표에 이어 김이배 교수(덕성여자대학교)가 좌장을 맡아 전규안 교수(숭실대학교), 배기수 교수(충북대학교), 최연식 교수(경희대학교)의 순서로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발표자 및 토론자의 세부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제1. 발생주의 국가회계 질적특성에 관한 연구〉

- [이종운] 충실성은 국가회계정보 유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접근성과 이해가능성은 신뢰성과 투명성의 매개효과에 의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유용성, 신뢰성 및 투명성이 강조됨을 확인하고 유용성 제고방안으로 국가회계정보의 활용 확대, 이해가능성 제고 및 의사결정자 중심의 교육 활성화를 제안하였으며, 국가회계인력의 전문화, 국가회계전문교육 체계화 및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의 위상강화를 신뢰성 제고방안으로 제시함
- [전규안] 설문지 응답자를 공무원과 공인회계사 또는 dBrain 시스템 사용자와 미사용자로 집단별로 구분하여 기술통계량을 제시하는 것을 제안하였으며, 국가회계정보 유용성에 각 질적특성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상과 결과의 차이점 분석, 직·간접별로 구체적인 개선방안의 제시가 필요함을 강조함
- [배기수] 설문지의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을 위해 Cronbach 알파분석과 요인분석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면서 국가회계의 질적특성과 K-IFRS의 재무회계 개념체계와의 비교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도출이 필요하며, 설문조사 대상 선정 시 분석대상의 전체규모를 파악하여 표본의 타당성에 대한 분석도 보고서에 제시하여야 함
- [최연식] 국가회계의 질적특성 간 유용성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고도화)에 대한 우선순위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K-IFRS, IPSAS 등 국내외 회계기준과 우리나라 법령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질적특성을 비교분석하여 차이점에 대한 설명과 각 계층구조 및 상충관계에 대한 분석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제안함. 또한 설문조사 시 질적특성의 정의와 문항별 참고 사례가 제시되었다면 응답자 별로 각 문항에 대한 일관성 있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개선방안을 제시함

두 번째 주제인 「재무정보 활용성 제고를 위한 국가결산보고서 개선방안」을 발표한 진태호 전문연구원(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은 국가회계 재무정보 활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다양한 재무정보가 제공되는 것을 선제조건으로 보아 결산보고서의 개선방안을 재무제표, 주식,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회계실체별 재무제표 작성, 사회보장성 실체 재무제표 작성, 내부거래 및 원가정보 주식 추가 제공 등 다양한 정보의 추가 제공 방안과 재정상태표·재정운영표 간소화, 주식과 재무제표 연계성 강화, 부속명세서 정보의 주식이전, 연금보고서 요약 등 결산보고서의 정보전달방식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주제발표에 이어 윤재원 교수(홍익대학교), 김주희 박사(감사연구원), 박성민 팀장(지방회계통계센터)의 순서로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플로어에서 관심 있는 전문가들의 토론이 추가로 진행되었다. 발표자 및 토론자의 세부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제2. 재무정보 활용성 제고를 위한 국가결산보고서 개선방안〉

- [진태호] 재무정보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선제조건을 다양한 재무정보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여 해외 주요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결산보고서 분석을 통해 재무제표의 다양화, 주식 공시사항의 확대, 필수보충정보와 부속명세서의 개편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함
  - 재무제표의 다양화 방안으로는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등 서로 성격이 상이한 각 회계실체별 재무제표의 작성과 국민연금기금·고용보험기금 등 국가가 미래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적립함으로써 국가 자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보장성 실체 재무제표의 별도 작성 등을 제시함
  - 주식 공시사항의 확대 방안으로는 재무제표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주식 신설, 자산·부채 정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제공 정보가 적은 원가 관련 주식 신설 등을 제시하였으며, 필수보충정보와 부속명세서의 개편방안으로는 방대한 양으로 제공되는 연금보고서의 요약본 작성, 부속명세서 주식 이전 등을 포함하여 제시함
- [윤재원] 활용성의 개념이 모호하므로 활용성에 대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며, 활용성 제고를 위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할 것을 제안함. 해외 결산보고서와 비교하여 1차적으로 누락된 정보 또는 불필요한 정보 여부에 대한 검토를 선행하고, 추가적으로 유용한 정보가 있다면 해당 정보가 주된 정보인지 보충적 정보인지 구분하여 제시하는 것이 적절함. 또한 정보의 활용성 측면에서 이해가능성 증진을 위해 정보의 요약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됨에 따라 연구범위에서 제외된 개요부분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으로는 국가 전체의 재무제표를 본문으로 하고 회계실체별 재무제표와 사회보장성 실체 재무제표는 주식으로 추가하는 등 정보의 중요성에 따라 본문, 주식 및 필수보충정보에 포함될 내용을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으며, 추가로 주식 정보 보완 시 현재 상대적으로 표 위주로 공시되고 있는 주식 정보의 충실성에 대해 점검을 선행하는 것을 제안함

- [김주희] 현재 결산보고서상 부족한 세입에 관한 정보 생산이 필요하며,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능별 원가정보보다는 사업별 원가정보가 더 유용한 정보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함. 또한 전기와 비교하여 금액적 변동이 큰 경우 정책 변동이 그 원인일 때가 많은데 어떠한 정책적 결정으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내용이 기술될 필요가 있으며, 주식 및 필수보충정보에 대한 표준안 개발이 필요하며 조세지출에 대한 정보도 결산보고서에 포함되는 것이 적절함
- [박성민] 결산보고서는 일반적인 지식수준을 가진 정보이용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너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결산보고서의 양이 많이 이해도가 떨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정부부문 재무제표에 연결재무제표와 현금흐름표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민이 필요함. 또한 정보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지표의 통일성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으며,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와 지방회계통계센터의 교류를 통해 결산보고서의 유용성 향상 및 재무회계와 예산회계의 연계 방향성 등에 대한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함
- [이종운] 회계실체별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 정보가 유용하다는 것은 동의하나, 법적인 책임소재 문제로 소관별 재무제표 작성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분야별 원가정보를 제공할 경우 개별사업과는 연관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능별 재무제표 작성 시 분야별로 작성할 것인지 부분별로 작성할 것인지 등 정보제공 수준에 대한 추가 고민이 필요함
- [신현걸] 유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정보이용자에 대한 개념 정립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학자들이 관련 연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의 축적과 관심이 필요함
- [정도진] 2017년에는 정보이용자를 정책당국으로 설정하여 예산편성 및 성과평가에 이용할 수 있는 재무정보의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음

세 번째 주제는 「발생주의 국가회계 재정정보의 유용성과 활용」으로 정도진 소장(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은 국가재무정보의 유용성 제고를 목표로 추진 예정인 연구과제와 이에 대한 선행연구 등을 제시하며 발생주의 국가회계 재정정보의 유용성과 활용에 대한 연구과제를 소개하였다. 발표자의 세부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제3. 발생주의 국가회계 재정정보의 유용성과 활용>**

- 발생주의 국가재무정보의 유용성이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예산과의 연계 미흡 및 발생주의 재무정보에 대한 해석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국회의 결산심사 시 활용이 제한되는 등 발생주의 국가재무정보의 활용성 제고가 시급한 과제임
  - 발생주의 국가재무정보의 유용성에 대한 실증연구가 요구됨에도 정보의 접근성과 용이성의 제한으로 관련 연구가 미흡한 상황이며, 발생주의를 기반으로 산출하는 국가재정통계도 5년이 지났으나 이에 대한 실증연구도 전무한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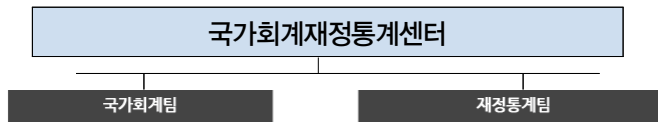
- 반면에 OECD의 주요 국가들은 현금주의 회계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발생주의에 기반을 둔 국가 재정통계를 산출하여 IMF에 보고하고 있으며, EU의 경우에는 2009년 재정위기를 겪으며 적정 부채관리를 위한 발생주의 기반의 재정통계를 산출함과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이에 발생주의 국가재무제표 및 재정통계정보의 산출 5주년을 맞이하여 그 유용성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정책적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구체적으로 효율적인 재정건전성 관리와 국가재정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도입한 목적에 따라 발생주의 국가재정정보와 거시경제 요소 간 유의적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발생주의 재무정보를 활용한 유용한 정책결정사례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3가지 연구주제를 검증함
- (현금주의 재정지출과 발생주의 재정지출의 차별적 설명력 검증) 현금주의 재정지출과 발생주의 재정지출이 경제성장과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차별적 설명력을 회계이론의 발생액을 통해 검증하여, 발생주의 국가재무제표 및 재정통계정보의 유용성을 확인
- (기능별 재정지출의 발생주의 도입 전후 효과 분석) 발생주의 기반의 재정통계를 활용하여 정부기능별 지출의 발생주의 도입 전후 효과 및 경제예측 효과를 분석하여 재정통계의 안정성과 유용성에 대하여 검증
- (발생주의 국가재무정보의 불용이월액의 관계성) 세출예산과 세출결산과의 차이, 즉 집행잔액은 차년도 이월 또는 불용으로 처리되고, 일반적으로 지급사유 미발생, 계획변경과 취소, 세수부족, 수시예산 미배정 등의 사유로 발생되나, 재정용자사업 또는 SOC의 시설비 등 사업별 특성에 따른 사유로 발생되기도 함. 현금주의 세출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발생주의 회계정보의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발생주의 도입으로 인한 유용성을 실증사례를 통해 검증 가능

# 08

## 공지사항

### 1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2017년도 연구과제 수요조사

우리 센터에서는 2017년도 수행할 연구과제 발굴을 위한 과제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제안 받은 주제는 자체 심의를 통해 기획과제, 정부수탁과제, 위탁과제 등으로 선정하여 수행할 예정입니다. 과제 제안과 관련한 센터 팀별 주요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에게서는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홈페이지(<http://gafsc.kipf.re.kr>) 의견제안 코너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회계팀 주요 업무		
국가회계기준 제·개정	국가회계제도 연구	국가재무결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부령) 및 회계처리지침(예규) 제·개정</li> <li>국가회계 실무해석 및 질의회신</li> <li>국제기준 및 주요국 동향 분석</li> <li>교육 및 대외 홍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가정보 활용방안 연구</li> <li>재무정보와 성과평가 연계방안 연구</li> <li>국가재정지표의 개발 등 재무분석기 발 개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금·중앙관서 결산보고서 검토 및 회계처리 이슈 대응</li> <li>중간점검 지원, 결산작성 지침작성 지원</li> <li>국가재무제표 작성지원</li> <li>감사원 및 국회 질의 대응 지원</li> </ul>

재정통계팀 주요 업무		
재정통계 산출	국가회계제도 연구	국가재무결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01GFS 기준에 따라 일반정부 재정통계 산출</li> <li>PSDS 기준에 따라 공공부문 재정통계 산출</li> <li>주요국 재정통계 동향 분석</li> <li>재정통계 작성 관련 교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기업 통합결산서 작성</li> <li>준정부기관 통합결산서 작성</li> <li>결산 관련 질의회신</li> <li>공기업·준정부기관 결산 교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제통계기준(GFSM2014, SNA2008, ESA2010)에 대한 연구</li> <li>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 개정 관련 연구</li> </ul>

## 2 센터 직원 포상현황

### 가. 센터 정도진 소장 우수논문상 수상

- 한국공인회계사회 2016년 우수논문상 수상
  - : 정도진·송원자·김동원 「감사인의 독립성 유착위협과 압력위협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효과」, 2015

### 나. 유영찬(회계사) 부총리상 수상

- 2016년 연말 업무 유공상
  - : 공기업·준정부기관 결산 검토 업무에 참여하여 결산교육, 질의회신, 결산서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결산서의 정확성 및 신뢰성 향상에 기여

## 3 뉴스레터 이용 안내

저희 센터에서는 2016년 상반기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뉴스레터를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하도록 개편하였고, 우편을 통해 정기적으로 뉴스레터 구독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① 국가회계 재정통계센터 홈페이지 (<http://gafsc.kipf.re.kr>)에서 가입신청 또는 ② Tel. 044-414-2259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4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홈페이지 이용 안내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2016년 상반기 홈페이지를 새롭게 개편하여 국가회계의 기준과 관련 법령 및 센터에서 진행하는 정책연구 관련 정보를 제시하며, 국가회계 기준에 대한 단순질의에서 문서질 의까지 질의회신을 통해 신속하게 답변하고 있으니 평소 궁금했던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뉴스레터를 비롯하여 각종 발행물과 세미나자료, 연구보고자료 등 국가회계와 관련한 다양한 자료를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중이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편 집**

정도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전체 총괄)

김은영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국가회계팀장(국가회계 총괄)

박윤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재정통계팀장(재정통계 총괄)

이정미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뉴스레터 편집 총괄)

■ 발행인 :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 발행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 044-414-2114(대표), <http://gafsc.kipf.re.kr>